第269回國會 (定期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7年9月14日(金)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현안보고
 가. 외교통상부 소관
2. 在外國民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
3. 世界貿易機構協定의履行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
4.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
6.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가입 동의안

審査된案件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1. 현안보고 ····· 1
 가. 외교통상부 소관
2. 在外國民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6
3. 世界貿易機構協定의履行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6
4.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6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 선언 동의안 ····· 46
6.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가입 동의안 ····· 46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원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외교통상부 소관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법률안과 동의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김원웅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한 가지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에 의하면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만 상정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법률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개의 법률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이 아니지만 위원회 운영 일정 등을 감안하여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현안보고

가. 외교통상부 소관

○위원장 김원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

상부 소관 주요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님, 그리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입니다.

오늘은 외교통상부 소관 현안 중 북핵문제와 6자회담 그리고 APEC 정상회의 결과 그리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제출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북핵문제 및 6자회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시 합의에 따라 8월부터 9월 초까지 5개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북측은 다음 단계 비핵화 조치 및 경제·에너지 지원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실무그룹회의 등을 통해 북측이 제시한 입장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 조치 관련 구체 방안을 논의했고, 이에 따라서 차기 6자회담에서 다음 단계 이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불능화 관련한 기술적 사항의 협의를 위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 실무기술진이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북한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이 실무기술진은 영변 핵시설 실사를 통해서 불능화의 범위와 기술적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 있고 이를 차기 6자회담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앞서서 현재 북한을 방문 중인 실무기술진은 내일, 9월 15일 판문점을 경유해서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우리 정부 측에 북한에서의 실무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힐 차관보 등이 우리 실무 기술진의 방북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하고 긴밀한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 실무그룹회의 결과는 도표로 간략히 요약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대통령께서는 6자회담 참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와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고, 저는 미국 일본 중국 외교장관과 각각 회담을 가졌습니다. 러시아와는 이에 앞서서 제가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회담을 통해서 영변 핵 시설 폐쇄에 이어서 한반도 비핵화의 본격 추진을 위한 불능화 과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한 정치적 추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다자안보 대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지금 관련국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9월 7일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6자회담과 남북 관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과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논의도 개시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남북 정상회담이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며 6자회담의 진전에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김정일 위원장 등과 종전, 전쟁이 끝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평화협정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향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음주 중반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6자회담에서 연내 불능화 완료 등 다음 단계 이행계획을 합의하도록 하여 제2의 2·13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 보고된 9월 19일 차기 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론에서 일부 보도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현시점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6자회담 이후에 10월 중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는 6자 외교장관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치적 추동력을 확보하고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의 출범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마련을 위해 직접 관련 당사국 간 별도 포럼에서의 협상도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향후 6자회담 과정을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구축과 미·북 그리고 북·일 관계 정상화 및 동북아 지역의 공고한 평화안보 구도 창출을 기대하고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북핵 및 6자회담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주 9월 8일부터 9일 사이에 있었던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내 공동체 심화 및 지속 가능한 미래 건설'이라는 주제하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의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금번 회의의 주요결과로 우선 기후변화 정상특별선언이 채택되어서 2012년 이후 소위 POST-2012의 기후변화 대응 체제 형성의 기본방향 설정에 APEC이 기여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APEC 지역이 동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금년 12월 발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POST-2012 체제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WTO 도하개발어젠다 소위 DDA 협상에 대한 특별성명을 채택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는 DDA 협상이 조기에 높은 수준의 균형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 접근 등 주요분야에서 WTO 회원국들이 신축성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태 자유무역지대, 소위 FTAAP를 APEC의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가능성 검토를 위한 실무작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테러 발생으로 무역 중단 시 신속한 무역 복원을 위한 APEC 무역 복원 사업을 개발하고, 식품유통 과정의 의도적 오염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APEC 식품방어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원국 경제의 구조 개혁 등 전반적인 경제 효율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에 합의하였습니다. 2008년 중 구조 개혁 장관회의 개최 그리고 지역 금융시장의 제도적 기반 확충 그리고 역내 거래비용 감축을 위한 제2단계 무역 원활화 행동계획 채택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들은 급격한 APEC의 확대보다는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 등 APEC 활동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신규 회원국 가입 논의를 2010년까지는 추가 동결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금번 시드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국 중국 러시아 등 6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각 회담별 주요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9월 7일 APEC 정상회의에 참석 계기에 회담을 갖고 그간 한미 양국이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온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 FTA 비준과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조기가입 실현 등을 통해서 동반자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보고드렸듯이 부시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면서 6자회담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하였고, 양 정상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아울러서 양 정상은 6자회담 진전 과정에 있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평가하고 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가능한 조속히 출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노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한중 수교 15주년과 그다음에 한중교류의 해를 맞이해서 양국 간에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다자 안보 대화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후 주석은 이 회담이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러시아와는 9월 9일 정상회담을 갖고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

은 우주기술 분야,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개최 및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사회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한국의 참여, 어떤 실질적인 협력 문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번 기간 중 하워드 호주 총리와 만나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지속적인 교역 증대와 더불어 한·호주 FTA 민간 간 공동연구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응웬 밍 찌엣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갖고 베트남 측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을 주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대해서 찌엣 주석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9월 9일 노 대통령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갖고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가르시아 대통령은 여수를 적극 지지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노 대통령과 가르시아 대통령은 자원·에너지·해양과학 협력,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호주·베트남·페루 정상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속적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APEC 정상회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제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경과입니다.

한미 FTA는 지난 6월 30일 서명되었고 정부는 FTA 국내대책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7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비준동의안 제출에 앞서 발표한 국무총리 담화문 주요내용은 배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준동의안 조기 의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시장 선점 등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급적 조속한 발효가 필요합니다. 비준이 지연되면 주요 경쟁국들과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시장 점유를 확대할 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로 한미 양국 국회의 심의절차가 달라서 양국 국회에서 한미 FTA를 동시에 통과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경우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법정 시한이 없습니다마는, 미국의 경우 이행법안의 제출에 대한 시한은 없으나 일단 법안이 제출되면 미국 의회는 최장 90일 회기일 내에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조기에 처리하면 미국 의회의 한미 FTA 인준절차를 앞당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국회의 비준동의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외통위 및 관련 상임위에 대해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처가 원칙적으로 금년 중에 국회 제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미 FTA 이행 관련 법률안 현황은 배포 자료의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은 9월 현재 각 소관부처별로 세부 보완대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미 FTA는 양국이 협정 이행을 위해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한 교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발효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제출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우리 국민 피랍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23명이 피랍된 사건은 지난 8월 13일 1차로 2명의 피랍자들이 풀려난 데에 이어 8월 29일 및 8월 30일 이틀에 걸쳐서 19명의 잔여 피랍자들이 전원 풀려남으로써 43일 만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랍자 중 2명이 희생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여러 방면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고 각별히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간의 사건 경과는 자료 12쪽의 내용으로 대신토록 하고, 정부 대응 및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0일 피랍 소식을 접한 즉시 외교통상부 내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시켰습니다. 조중표 제1차관을 현지에 급파해서 현지 정부합동대책본부를 7월 22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사건 종결 시까지 피랍자들의 조기 무사 귀환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아프간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보 교류와 군사작전 자제 그리고 우리 대표단 및 석방자 안전 보장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아프간 정부의 협조로 가즈니 지역 원로·의원 등을 통해 납치단체와의 간접 접촉을 사건 초기단계부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프간 주둔 미군, 국제치안유지군 그리고 우방국, 유엔 등 국제기구와도 수시로 관련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우리 대표단의 현지 활동은 물론 대면접촉 그리고 석방자 이송 등의 과정에서도 이들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제공받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우디 UAE 파키스탄 등 이슬람권 국가들로 하여금 탈레반 측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지난 8월 25일~29일 간 사우디 카타르 UAE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탈레반 압박을 위한 지역 및 국제사회의 여론 조성 활동도 사건 해결에 큰 몫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우리 측은 사태 발생 초기부터 납치단체 측과 직간접 접촉을 유지하면서 피랍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무사 석방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끝으로 정부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는 한편 해외 안전여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치안상황 악화에 따라서 현지에 잔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조속히 철수하도록 강력히 권고함과 동시에 주아프가니스탄 우리 대사관 및 직원에 대한 경비·경호 태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슬람권 국가와의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시키고 이슬람 전문가 양성 등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우선 외교통상부 내에 상설 종합상황실을 설치할 예정이고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위기 대응 체계를 재점검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외교통상부 소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 한 분의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위원 한나라당 박진 위원입니다.

우선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사건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국민들이, 21명이 무사히 생환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 배형규 목사, 고 심성민 씨, 탈레반 무장단체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외교부가 과연 제 역할을 다 했는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는 소외되고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이 과잉 노출을 했고 또 대테러 전문요원까지 등장을 해서 공개가 됐고, 국정원의 활약상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순 장관 자신도 “외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다.” 이렇게 지난번에 고충을 토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가 소외된 것입니까, 아니면 외교부가 역할을 못 해서 지휘권이 국정원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제가 이런 납치 사건에 있어서 외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것은 우선 이런 사건이 나고 나서 이것을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나지 않도록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안전을 잘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이 조금 달리 해석이 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진 위원 그러한 표현은 적절치 않았죠? 장관께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외교부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납치가 된 상태에서 '외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납치가 안 되도록…… 거기다가 '외교부'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박진 위원 알겠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 외교부 국정원, 정부 부처의 대표들이 많이 가 있었는데, 협상 방식에 대한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협상 방식에 대해서 정부 내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견 때문에 국정원에 협상지휘권을 빼앗긴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외교부가 공개적인 외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차원에서 해야 될, 국정원은 국정원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역할 분담을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 위원 지난번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6일 국회 정보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탈레반과 또 약속한 게 있어서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번 협상 과정에서 무슨 이면합의가 있었습니까?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따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진 위원 한국 정부가 테러 단체와는 협상하지 않겠다 이런 국제사회의 원칙을 깨트리고 무장 테러단체의 요구에 굴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리는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박진 위원 우리라고 하는 게 누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정부가…… 제가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직간접 접촉 그리고 대면접촉이라는 말까지만 쓰겠습니다.

○박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협상을 한 주체는 우리 정부가 아닌가요? 다른 무슨 시민단체가 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정부는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박진 위원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협상을?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거기에 있는 것은 정부가, 임시로 만들어진 하나의 협상팀이지……

○박진 위원 국정원은 정부가 아닙니까? 국정원장이 현지에 가서 협상을 사실상 지휘하고 또 선글라스맨까지 동원을 해서 국정원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과잉 홍보까지 했는데, 그러면 누가 협상을 한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하나의 팀이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이지 정부 협상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박진 위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무사 생환한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테러단체에 납치나 또는 이런 생명 위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우리가 1년에 1300만 명의 해외 여행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사인력에 투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크게 확대를 해서 한 500명이 되지 않는데 500명이 1300만 명의 안전을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우선은 여행객 개개인이 좀 안전을 챙기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앞서서 정부는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망이나 여러 가지 외교망을 통해서 사전에 위험지역 이런 데 대해서는 일종의 여행 자제 권고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은 조심해라' 하는 권고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진 위원 지난번 인질사건 일어나기 전에도 "아프간 지역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여행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이런 공문이 공항에 다 붙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났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질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진 위원 그리고 북핵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10월 초에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의제는 북한 핵을 폐기하는 것이 어젠다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장관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또 지금 현재 의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남북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남북 관계를 지금보다 더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북한 핵문제는 핵문제가 갖고 있는 성격이 한반도적 성격이 있고 국제적 성격이 있는데 현재는 6자회담이라는 틀에서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6자회담에서 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가속화시키고 보완시켜 주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 위원 남북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여러 가지 상호 불신도 있고 지금 이야기하신 북한 핵문제라는 또 중차대한 문제가 가로놓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진 위원 중차대한 핵문제가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박진 위원 그리고 대한민국은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지요. 남의 일이 아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습니다.

○박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핵문제를 빼고 다른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번 기자 간담회에서 "북핵, 북핵이라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것은 정략적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북핵을 말하라는 것은 가급적 가서 싸우라는 얘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 협상은 현재 협상의 장소가 6자회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뜻이지 북한 핵문제 자체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박진 위원 지금 우리 정부에서 북핵문제의 주무장관은 누구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입니다.

○박진 위원 외교장관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박진 위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외교장관은 왜 빠졌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이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외교통상부가 거기에서 적절하고 합당한 역할을 사전 또 중간 또 사후에 할 것입니다.

○박진 위원 그러면 이번 국방장관이 들어갔는데 국방장관은 왜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핵문제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국방장관은 또 기존에 우리가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도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원래 정례화하기로 했고 1차 있었습니다.

○박진 위원 NLL 재설정 문제 때문에 국방장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합당하지가 않고요, 남북 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그 후속 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진 위원 NLL 재설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남북 간에는 많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방장관이 포함된 것은 정상회담 이후에 이루어지는 각종 채널에서 국방장관의 회담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진 위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화선언

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저도 엊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의 개시에 대해서는 논의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내일 아침 자고 나서 '평화가 됐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진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장관께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박진 위원 그러면 지금 평화체제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북핵문제 해결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피스 프로세스(peace process)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화과정을 죽 해서 그 끝 부분에 가서 이제는 전쟁의 상태는 끝났고 소위 휴전의 상태…… 이제 평화의 상태로 들어간다고 선언할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러한 시점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당장 어떤 시점을 두고 내일 모레, 어디서 만났다고 해서 '자, 오늘부터 평화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달 위원 아프가니스탄에 인질이 잡혀 있을 때 여야 원내 대표단이 뉴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엔 주재 아프가니스탄 대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말한 이야기는 뭐였느냐 하면 한국 인질이 잡혀가자마자 자기네들은 군사작전을 하자고 했었다, 그래서 23명의 인질들을 군사작전을 통해서 처리해 보자,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다고 그랬어요. 한국 정부는 그렇게 되면 인질 모두가 사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군사 작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한다고 보면……

○장영달 위원 일단 본 위원은 당시에 군사작전을 반대하기는 참 잘했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당장에 군사작전을 했더라면 23명 모든 인질은 사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에 초장에 군사작전을 요청했다는 것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군사작전을 반대한 것은 잘했다, 군사작전을 했더라면 23명 모두가 사망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참으로 배형규 목사님과 심성민 씨 두 분이 사망을 해서 여간 안타까운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나머지 인질들을 구출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제가 보기로는 참여정부에 들어서 신정아 사건이 최악의 사건이라고 하면 인질을 구출해 낼 수 있었던 정부 당국의 노력, 이 부분이 그래도 상당한 최대의 성과가 아니었는가 보아서 높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중동 문제인데 후세인 독재정권을 축출하고 이라크에 민주정권을 수립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7월 초순에 제가 이라크 방문을 겸해서 요르단 등 몇 개 국가를 방문했을 때 느껴진 점은 뭐냐 하면 이 이라크전쟁이 이제는 독재정권으로부터 어떤 민주정권으로의 해방을 위한 전쟁의 성격이 아니고 기독교권이 이슬람권을 압살하려고 하는 종교전쟁의 성격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슬람권에서. 이렇다고 봤을 때 이라크전쟁에 우리가 군을 파견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동정책에 대해서 대단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전쟁 성격으로 보아 가는 이 부분에 대한 중동지역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의 보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듣고 온 내용과……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이라크 사태가 종교전쟁적 성격으로 발전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라크는 결국은 이라크 주민들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도

록 국제사회가 지원하도록 하고 우리 정부도 그러한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권에서는 이것이 기독교권의 도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날이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라크전쟁이라거나 중동정책에 대해서는 인류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도 거기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이라고 하는 외교정책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뿐만이 아니고 세계가 그러한 인식을 갖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라크전쟁은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북핵문제입니다.

미·중·러시아 3개국 기술팀들이 북한에 들어가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장영달 위원 북한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지켜본 바에 따르면 북핵 불능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이 긍정적이다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러면 부시 대통령이 본인도 이제 임기 말년에 들어가면서 나는 이미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협력이 없이 남북 관계를 우리가 순조롭게 풀어 가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렇습니다.

○장영달 위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마 그러한 차원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도 동맹국이 가 있으니까 1년 더 연장을 해 보자 이러한 안을 정부가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10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이러한 미국의 동향으로 보았을 때 이제 분단체제로부터 우리 민족이 완전 해방될 수 있는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적어도 가늠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협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정부로서는 그러한 기대를 우리 국민들이 해도 크게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해도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것은 기대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영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 과정에 하나의 과정이 있고 또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평화협정에 같이 관련된 국가로 서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결심을 가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평화체제에는 남북한 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은 또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이 어느 정도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그때는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장영달 위원 좋습니다.

제가 6년간 국방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70만에 가까운 국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는 대단히 정예화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질이 대단히 높은 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70만의 군대를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북의 도발을 막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대신 남북협상에 있어서는 이러한 국방력을 밑바탕으로 자신 있게 협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 국방이 허물어질까 봐서 염려할 것 없이 남북의 전쟁 상태를 해소하는 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적어도 평화체제로 급선회하는 이러한 협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평화체제라는 것이 평화의 프로세스, 이것이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평화체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당장 하루아침에 급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미 그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장영달 위원 좋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가속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장영달 위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

도의 비핵화 정책, 북한도 지금도 유효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습니다.

○장영달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장영달 위원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도 같은 입장이냐, 이 부분은 확인되어야 된다고 봐요.

다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에서 할 일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시간만 허비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북한하고 협상을 할 때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있어서 불변인가 이 점은 확인하되 북한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에서 그것들이 이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6자회담분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남북 간에 북핵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 적절한 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장영달 위원 아베 총리가 사임을 했는데 일본의 대북 강경노선에 의해서 일·북 국교 정상화 문제라거나 관계 정상화가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 아베 퇴진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리는 일본이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면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이러한 일·북 관계 정상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영달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라크에서 김선일 사건이 났을 때 우리 외교부도 중동 전문가를 대대적으로 양성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그 점에 대해서 중동 전문가를 어느 정도 양성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전문가는 하루아침에 양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 양성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인원 채용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달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장영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甲 委員 송민순 장관 수고가 많습니다.

송민순 장관을 처음에 장관으로 임명할 때 미국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부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고 잘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회담의 중점이다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평화체제가 확립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종전을 선언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옳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언론에 이야기한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이지요, 대통령께서 9월 10일에 이것과 관련해서 선언도 있을 수 있고 협상의 개시도 있을 수 있다, 협상은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일련의 협상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평화과정의 시작이다, 과정의 시작이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金容甲 委員 똑같은 내용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송 장관의 말이 옳은 말이에요. 제대로 지적한 것이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송 장관이 말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송 장관이 이야기한 중에 종전선언을 지향해야 하지만 휴전상태에서 평화상태로 순식간에 올 수 없는 것이다, 아주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송 장관의 그런 자세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반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한미 FTA 비준을 조속히 좀 해 달라 그런 주문을 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金容甲 委員 그런데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

과하려면 지금 피해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한미 FTA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특히 피해가 많은 농촌지역에 혁명적인 대책이 없이는 비준이 통과하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통상본부장, 기억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제 전임 본부장께서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容甲 委員 그러면 김현종 본부장이 그렇게 발언하면 현재 본부장은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아닙니다. 그런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金容甲 委員 동감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재 부처별로 죽 피해대책에 대해서 세운 것을 보니까 과거에 세웠던 것을 재탕 삼탕하는 그것에 지나지 않고 혁명적인 것은 고사하고 전혀 일반적인 대책도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국회에서 이번에 실제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통상본부장이 답변해 보세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농업을 중점적으로 거론을 하셨는데요, 정부로서는 농업도 농업이고 그다음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다음에 근로자의 근로 안정, 이런 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농업에 관한 대책이고요, 농업에 관한 대책은 기왕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던 112조 정도의 투융자를 포함한 그런 대책에다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金容甲 委員 지금 한·칠레 FTA하고는 전혀 다르고 한미 FTA는 그야말로 농촌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하는 것은 농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외교통상부가 전체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 통과하기 어렵다……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지금 미국 의회가 어떻고 한국 의회가 어떻다 하더라도 이것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정부의 혁명적인 대책이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민순 장관 말이지요, 아까 박진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최고의 국민적 관심사는 북핵문제 해결입니다. 북핵 폐기인데 6자회담에서 해결될 문제니까 이것을 의제로 우리 대통령이 가서 그 문제를 또 끄집어내서 싸움하라 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6자회담에서 논의될 문제이고 진행될 문제지만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어떤 정도의 확신을 갖고 이것을 폐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이것은 6자회담에서 진행할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바에야 남북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는 남북이 서로 협력한다, 교류한다,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송 장관이 아까 NLL 재설정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통일부장관보다는 우리 국방부라든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에 의제를 올려서 재설정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우리의 현재, 예를 들어서 모든 군사적 긴장조치, 그다음에 평화로 가는 모든 조치가 다 끝났을 때 논의할 문제이지 지금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공동어로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NLL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미 92년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서로 양측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해상경계선을 한다, 그리고 남과 북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을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그런데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틀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金容甲 委員 근본적인 큰 변화는 없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렇습니다.

○金容甲 委員 그런데 통일부장관은 NLL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이번에 논의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장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장관은 NLL이 뭐냐, 이것은 영토 개념이 아니고 안보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해서 우리에게 혼란을 좀 주고 했습니다마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토 개념입니까, 아니면……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게 법적인 의미와

정치적인 의미의 차이를 두고 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치면 우리 헌법 2조인가, 3조인가……

○金容甲 委員 헌법 3조!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의미로 하면 사실 영토는 그보다 훨씬 넘어서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金容甲 委員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통일부장관은, 헌법적인 측면에서야 북한도 우리의 영토지요.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는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 영토입니다. 우선 그렇고, 시간이 다 됐네……

인질 사태에 대해서 해결하는 데 우리 외교부도 많은 노력을 해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가서 국정원이 개입해 가지고 이상한 모습을 보였어요. 국정원장이 공개적으로 나서고 말이야. 이것은 국정원장이 아주 잘못한 겁니다. 외교부가 노력해도 충분히 조용하게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를 거기다가 국정원장이 가 가지고 자기가 전부 다 지휘해서 다 한 것처럼 말이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은 우리 외교에도 아주 막대한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첫째 이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너무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앞장서서…… 대통령도 그렇지만 늘 이런 사항을 직접 브리핑을 하고. 이것은 외교부가 했어야 할 텐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 또 국민적 관심의 정도에 비추어서 청와대가 적정한 수준의 관심을 갖고 또 직접 관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金容甲 委員 그러면 앞으로 모든 외교도 청와대가 직접 하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무래도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容甲 委員 시간이 없어서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위원 정의용 위원입니다.

저는 외교부가 송민순 장관님을 비롯해서 아프간 인질사태 또 APEC 정상회담 준비, 6자회담 또 FTA 후속조치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분주하고 또 일들을 다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마음은 흡족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제가 질의에 앞서서 국회 쪽에서 본 소견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아프간 인질사태 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 국가로서는 가치 중심의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국가로서의 품격(integrity)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 강대국 사이에 끼인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오는 외교적 불리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와 정부의 해결 노력, 결과를 죽 보면 우리 정부가 앞으로 두고두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교훈을 준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와 가까운 몇몇 우방국들이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의 협상 문제를…… 우리 정부는 장관께서 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협상 사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도 우리가 잘 좀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정부가 조기에 국회에 제출한 것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 시장의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미 의회가 어떻게 하느냐를 생각할 것 없이 우리 국회가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해도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FTA의 조기 비준을 지지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촌 지역 출신 의원님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피해 대책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 장관님께서 대통령께 적극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 중에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수행원에 포함 안 되신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외교부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특히 송민순 장관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남북 관계라는 것은 91년도에 우리가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나옵니다만,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외교부장관이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색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수행원에 포함 안 됐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러나 어제 이재정 통일부장관께서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의미 있는 결실이 과연 무엇인지, 또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총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면에서 송민순 장관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또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과정, 소위 피스 프로세스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평화체제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에 있어서 우리의 아주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자세가 꽤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제도 야당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확정된 후에 미국에 불과 수 시간 전에 알려줬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정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면서 "그간 사실은 수개월간에 걸쳐서 미국과 정상회담의 필요성이라든지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에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했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 김만복 원장이 8월 2일, 3일 1차 방북을 하고 돌아와서 8월 3일 날 실질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고, 다시 2차 방북을 하고 8월 5일 일요일 날 개최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월, 화 양일간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8월 8일 날 발표했는데 그 직전에 미국에 통보해 줬다는 것은, 그게 사실이라면 한미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보면 지금 6자회담 5개 실무그룹 회의 중에서 가장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일·북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월초에 개최된 지난 울란바토르 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납치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일본이 납치 문제를 핵문제 해결과 거의 동급에 놓고 병행해서 해결을 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납치 문제가 갖고 있는 일본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중요성 같은 것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북측에 전달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2개, 미국과 일본 관계에 대해서 송 장관님 답변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미 간의 협의는 가급적 충실히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미국 쪽에도 알게 했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의용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정해지는 과정에서 급박하게 움직이면서 조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 사후에 그것을 또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북 이 부분도 좋은 말씀이고 또 일·북 관계가 좀 돼야 북 비핵화…… 일·북 관계가 평화체제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고자 지금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위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미국과 특히 긴밀한 공조를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교부에서는 그러한 점에 착안을 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NLL 문제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송 장관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NLL은 여러 가지, 그것 자체가 갖고 있

는 전략적 가치라든지 또는 경제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앞으로 남과 북이 계속 협의한다.” 이렇게 합의를 해 주고 실제로는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렇습니다.

○정의용 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북이 이 문제를 거론할 경우에 거론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저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이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문제 자체도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현재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관계 진전 상황으로 볼 때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은 보면 군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성이라든지 금강산, 특히 내금강 관광을 제가 최근에 하고 왔습니다만, 북으로서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을 남측에 거의 완전히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한 송 장관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NLL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기본합의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속합의서가 있고 그 합의서의 틀에서 하고 이 합의서라는 것은, 그것을 깔고 있는 배경은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교류·협력을 논의하는 그 자체가 신뢰 구축의 한 부분이고 또 군사·안보 면에서 신뢰 구축은 비핵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신뢰 구축 과정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에 합의된 틀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정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武星 委員 국민의 마음을 많이 졸이게 했던 아프간 탈레반 무장 세력에 납치됐던 한국인 인질, 두 분이 희생되는 비극은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19명이 무사히 구출됐던 것은 참 큰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희생된 두 분의 명복을 기원합니다마는, 피랍의 규모가 너무 커서 대응 수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위야 어떻든 간에 위험에 빠진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고 그 원칙은 흔들어서도 또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만 내국인 출국자가 1160만 명을 기록하는 등 해외로 나간 국민들을 정부 차원에서 일일이 완벽하게 돌볼 수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인질사태는 테러단체와 협상하는 국격 훼손과 또 인명 피해의 값비싼 대가를 치른 만큼 정부도 재발 방지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 국민 개인의 책임의식도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는데, 정부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지금 가장 구체적인 것은 지난 8월 7일 발효가 된 새로운 여권법에 의해서 아프간하고 이라크는 정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여행객은 입국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징역 1년까지 형에 처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아프간과 이라크의 경우에 사정을 봐 가면서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조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앞으로……

○金武星 委員 알았습니다. 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문제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결국은 순교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교하러 가는 분들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종교계를 잘 설득해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련 부처가……

○金武星 委員 어떻게 병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위험 지역에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안전, 또 언제…… 지금 이번에 돈맛을 안 테러집단에서 또 범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 있는 위험지역에 있는 선교사를 불러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파견한 수뇌부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빨리 명령을 내려 가지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제

일 급선무인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지금 김무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민감하고 또 사실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파송하는 단체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방법은 현행 법 제도 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권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를 다 여행 금지를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로 설득을 하고 있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정부뿐만 아니라……

○金武星 委員 장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우리가 8월에도 40개 선교단체들을 같이 모아 가지고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이러한 나라는 이런 점이 있으니까……

○金武星 委員 며칠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8월 중에 전부 다 한 게 한 40개 단체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필요하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武星 委員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히 국민들이 위험에 접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시간 지체해서는 안 되고 현행으로 말이지요,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이슈화해 가지고 종교계 지도자들과 마음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해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장관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최대한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金武星 委員 그렇게 하시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것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이미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가 유리한 입장의 고지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북측은 좀 더 많이 얻어 내려고 할 것이고 남측은 적게 주면서 북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누가 더 급한 입장이 되느냐 이것을 밀고 당겨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현 정권이 임기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정권 재창출이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 놓이니까 북한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것입니다, 협상과정에 있어 가지고.

4개월 전에 하는 것과 후에 하는 것, 국가적 차원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그야말로 애국심에 입각해 가지고 내 임기 말에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남북한의 미래 백년대계가 중요한 것인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후임 대통령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협상의 유리한 입장에 서서 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을 좀 고민했어야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 임기 중에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임기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비판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면 결국 대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권 창출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 노무현 정권에게 김정일은 정상회담을 허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 갈 것인가, 그것은 곧 국력·국익 손실이 아닌가 이것이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결국 협상에 불리한 입장에서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내준 카드가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북한 핵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외교부장관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외교장관을 빼게 된 것은 북핵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말씀이지요, 김무성 위원님, 남북 정상회담이 임기 말에 있기 때문에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남북 관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쪽이 북측에 끌

려 다니고 그러한 형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상회담은 자주 할수록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분명히 서로 주고받을 거라든지 균형은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武星 委員 그 이야기는 여러 번 정부 측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은 반복하지 마시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교장관은, 반드시 장관이 아니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 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고 필요한 수준에 외교부가 관여하고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회담 전·중·후 다 할 것입니다.

○金武星 委員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면서도 "당면 외교 노력의 진정한 무게 중심은 6자회담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이렇게 밝힌 점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잘 커버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께 말씀드립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 이것을 국회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노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게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서 FTA 체결이 다소 늦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미국과의 협정 발효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한미 FTA는 비준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과 국익에 좋은 FTA가 되느냐가 관검임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오로지 대선 및 정치 활동에만 신경을 써서 정당과 정파와의 대화와 설득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각종 보도를 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미국 의회 내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반대 목소리가 커질수록 또 우리가 어려워지는데 빨리 이게 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정부 안에서의 기본적인 시각은 지금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양측 간에 다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본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양측 간에 공통으로 갖고 있는 그런 중대한 정치 일정과 연결돼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저를 포함해서 또 저희 장관, 각 부처의 장관들 또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상황에서 필요한 타이밍에는 십분 필요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金武星 委員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때에 대통령께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가지고 설득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위원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 다음 주로 예정된 6자회담 준비 등으로 바쁘신 외교부장관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핵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6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수레바퀴처럼 동시에 굴러가야 할 사안인데도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꾸준히 논의가 돼 왔는데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설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문희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한 수레를 이끌어 가는 두 개의 바퀴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또 그래야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지극히 시의적절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문희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파 언론이 오늘도 많은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대목에 평화 정착 문제를 의제로 삼으면서 핵문제를 다루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고 그 하나를 다루면 하나는 당연히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평화체제 구축의 문제는 북핵문제가 해결된 다음 이후의 문제까지 내다보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북핵문제를 정상회담 제1 의제로 삼아야 된다는 주장을 자꾸 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에 갇혀 있는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대선을 의식해서 정상회담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정략적 차원의 발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 문제는 아주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 북한이 핵 폐기하는 것에 대한 대응 요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에너지 지원을 해 달라는 것하고 하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 달라는 겁니다. 적대적 정책의 포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이 미·북 관계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미·북 관계 정상화는 다시 한반도 평화체제의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불가분의 틀 속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시고 이것을 그렇게 냉철하게 평가하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희상 위원 예, 그렇습니다.

9월 초에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하고 후진타오 주석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PEC 당시 한미 정상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남북한과 미국 등 3자가 참여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질서를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에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2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중국이 평화협정 서명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평화협정이 될지, 지금 말씀은 그냥 협정이다 조약이다 체제다 혼용해서 쓰는데 실제 그게 결과로 이러한 평화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중국이 현재 휴전체제에 있어서 당시 중국 인민의용군이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대체될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들을 여러 나라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지금 좀 빠르다고 봅니다.

○문희상 위원 아프간 피랍 사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그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다하신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두 분의 희생이 있었지만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19명의 피랍자가 무사히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은 누가 뭐래도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대한민국 외교력의 성과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물론 국가의 품격이라든지 또 탈레반과 직접 대화해 가지고, 국가적 승인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반란 단체의 승인까지 간 것 아닌가라는 우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한 강대국들 몇 나라의 불만의 소리,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오히려 그렇지 않고 잘못돼 가지고 피랍된 인질들이 죽었다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국 외교는 엉망진창' 하고 또 국내에서도 비판의…… 아마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약소국의 외교 방향으로서 강소국의 논리, 도덕적 우월성을 가져야 된다, 국가의 품격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작지만 큰소리를 치는 게 돼야 된다라는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한민국의 외교력의 성과로 이번에 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초기부터 우방국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고 군사작전을 배제하는 원칙을 세웠고 평화적으로 설득하여 해결한 점은 아마 그 누가 뭐래도 외교의 승리다라고 보고, 특히 그 해결 직후 유엔 통의 주변 외교관들에게 나온 소리로 한국 외교의 최고의 승리다라고 극찬을 받은

것도 아주 제대로 잘 본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외무장관께서 3개국 순방을 해 갖고 이슬람 국가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한 점, 그리고 앞으로 이슬람권의 외교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큰 영향을 줬다는 점, 이런 모든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아주 잘 된 일이다라고 평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셨고, 또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해결의 과정에는 반드시 그 뒤에는 찌거리가 남게 돼 있고 대가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도 노력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건이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국민들도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건이 나고 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아주 제약되기 때문에 거듭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문희상 위원 아까 김무성 위원께서 적절히 질의하시고 답변 주셨기 때문에 예방에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인질 사태에 관한 처리 문제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에서 생략하고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랍 사태를 전후한 한국 언론의 방향에 관해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우리 모두 서로 걱정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피랍 사태는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신보도에 대한 맹신으로 오보를 양산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가적 위험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기자들의 아프간 입국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현지 취재의 한계가 있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의 거듭되는 오보를 국내 언론이 사실 확인 없이 경쟁적으로 인용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언론 내부에서조차 아프간 피랍 사태를 통해서 한국의 외신보도 수준을 여실히 드러냈다, 외신보도조차 받아쓰기 경쟁을 했다는 등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외신 받아쓰기 경쟁을 했던 일부 언론이 사태가 해결되자마자 또다시 외신을 인용해 가지고 직접 협상의 문제점이니 이면거래의 의혹이니 하면서 협상력을 많이 떨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 피랍자들의 성폭행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막 악몽에서 벗어난 피랍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금 고통을 안긴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오보 사태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다시금 외신보도의 인용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의 성숙한 자세가 이럴 때일수록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피랍자 가족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신중한 보도 자세를 취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사실 언론이 현지에서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불가피한 안전 때문에도 그렇고 또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현장 취재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에서 이렇게 나오면 정부 당국이 한번 확인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당국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는 못 하더라도 방향은 맞추어 줄 수 있는데 그런 확인 없이 이렇게 보도되는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심하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봉 위원 이해봉 위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보는 시각이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이용해서 미국을 자극하고 그래서 평화협정체제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받는 유리한 국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남한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더 많은 경제적 요구를 유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보는 시각은 대선을 앞두고 평화선언이든지 무슨 종전선언이든지 이런 평화체제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합의함으로써 여권 득표용으로 이렇게 하고자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한민족재단 이창주 상임의장이라는 분이 9월 1일 날 인터뷰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난 8월 북한 고위 당국자들과의 접촉 후에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연기한 것은 정상회담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미국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이 처음부터 남북 정상회담을 찬성한 것도 아니고 원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하겠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그러면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국제한민족재단 상임의장의 전언에 의하면 북측이 이번 정상회담에 동의한 이유는 북한이 먼저 행동, 소위 비핵화하기만을 기다리는 미국에 자극을 줘 가지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남북 관계 개선은 아주 부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는 것이고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서 들어간 꼴이 되고 있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진정성과 효용성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이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한 고위 당국자들까지도 미국은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 발표 후에 불평스러워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국은 북·미 양자 접촉을 통해서 지금 6자회담이 잘 되고 미국이 북·미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그런 불평을 쏟았다 이렇게 지금 북측 고위 당국자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측 당국자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왜 남북 정상회담을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부가 밀어붙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반 추측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려를 갖고 있다면……

○이해봉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추측이 아니에요. 이야기한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려를 갖고 있다면 그 우려는 남북 정상회담을 함으로 해서 비핵화에 김을 빼는, 현재 하고 있는 비핵화 여기에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싶어서 우려하는 것이지 미국이 기본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할 이유도, 그러한 타당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한미 정상이 회담을 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하는 것이 비핵화에도 도움이 된다, 상호 선순환적 작용을 한다는 것은 양 정상이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기자회견에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이것을 자극해서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활용한다.' 이러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되기 이전에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들이 이미 다 개시되어 가지고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이것을 거꾸로 이용을 해야 될 만큼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의 입장을 배려해서 북한이 연기했다 이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추측이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봉 위원 지금 나온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 당국자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 핵 폐기를 아무리 공언을 해도 핵 폐기까지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첩첩산중일 것입니다. 또 빅터 차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했잖아요.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문제에 대한 점검과 한반도 평화조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 폐기하기 전까지 관계 정상화나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남북 관계 정상화라고 언급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평화 정착 문제, 다시 말하면 남북 관계 정상화를 핵심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의 견해하고 미국 측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우리 한국이 합의를 본 의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지금 '의제' '의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의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나 서로 이야기를 꺼내고 대화를 하면 의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해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국의 이야기,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 제가 설명한 이야기가 다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다르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 폐기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핵 폐기가 되면 그때 가서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든 뭐든지 된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언론에서도 과정은 시작하고 과정이 끝날 때 종전 선언하고 평화체제든 협정이든 뭐가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저께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일련의 협상의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정의 시작을 얘기한 것이지 과정의 종결을 내일 당장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누가 얘기했든 대통령께서 얘기했든 제가 얘기했든 그것은 다 같은 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시 대통령도 같은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봉 위원 그런데 어제 통일부장관한테도 질의를 하니까 애매한 답변만 하고 결국 끝이 났는데 정상회담을 하자면, 무슨 실무자회담도 아니고 정상회담을 하자면 사전에 치밀하게 실무자들끼리 조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양쪽의 정상이 만나는데도 아직도 의제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만나서 서로 의제가 성립될 것이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사전에 거기에 대한 준비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봉 위원 준비접촉을 하는데 어떤 의제가 준비 접촉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준비접촉의 결과를 가지고…… 아직 준비접촉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해봉 위원 현재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쪽에서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의제는 기본적으로 큰 의제가 우선 남북한 관계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려면 핵문제 같은 것도 당연히 논의가 됩니다.

그러나 핵문제는 이미 그것의 본회담장이 북경에서 6자회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남북 정상이 북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서로 협상을 하고 주고받고 할 그러한 성격이 아닌 뿐이지……

○이해봉 위원 남북 관계의 발전과 남북 화해, 안정, 이런 것이 주 의제가 된다면 당연히 그 안에는 소위 종전선언 문제라든지 평화협정까지도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사람들이 종전선언이라고 얘기해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평화가 되느냐, 전쟁이 끝나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 있는 휴전체제를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신뢰 구축 과정을 거쳐서 평화체제로 만들면서 그러면 전쟁도 끝난 것이고 평화다 이렇게……

○이해봉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래 신문에 나왔던 장관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베트남을 보고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알 수 있는 것인데……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대통령도 같은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봉 위원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인데, 예를 들면 아래 장관이 그런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인데, 잘못하면 종전선언까지 이런 단계까지 가고 나서 잘못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마치 핵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종전선언만 덜렁 해 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평화체제라든지 핵무기 해결 안 된 상태가 되면 사실상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사이에 안보질서의 혼란과 공백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장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러한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해봉 위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인데……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런데 그것은 정부 입장입니다. 제가 무슨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봉 위원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인데, 국민

들이 보기에는 지금 북한에 가 가지고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에 관련된 절차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 가서 갑자기 종전선언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은 개시되어야 된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해봉 위원 장관이 거기에 참석도 못 하는 입장이라서 장관에게 이야기하기는 뭣합니다마는 남북 정상회담을 보는 시각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웅 예, 이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래 위원 이강래입니다.

장관님,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장관께 6자회담 또 핵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차기 6자회담은 다음 주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원래는 19일 날 열린다고 났는데 19일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래 위원 지금 이 시간에 북핵실사단이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지요? 내일까지 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내일까지 하고 판문점 경유해서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고 갈 것입니다.

○이강래 위원 여기 보니까 미국 7명, 중국 러시아 각 1명씩, 도합 9명인데 우리나라가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이것은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이—핵 보유국 아닙니까—기술적인 바탕을 가지고 그렇게 실제 현장에 가서 실사하고 협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래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비판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은,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지원이지요, 지원은 다 우리가 하고 지난번 과거에 경수로 문제처럼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다라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다른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역할 분담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고요.

○이강래 위원 원자력 연구 관련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좀 과소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그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9월 2일 날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회담을 통해서 연내 불능화, 또 중요 목록 신고를 하겠다고 합의를 본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렇습니다.

○이강래 위원 그러면 양쪽의 합의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이강래 위원 될 것으로 보십니까? 연내에 될 것으로 보시냐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연내에 될 것으로, 서로 그렇게 하자고 합의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또 연말까지 가서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래 위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웅 위원장, 이화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강래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테러 지원국 명단 삭제 문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문제에 대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에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까?

○이강래 위원 북한에서는 이것을 연내에 확실하게 기정사실로 보는 것 같고 힐 차관보 얘기를 들어 보면 테러 지원국 문제는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주 여지를 두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소위 불능화를

진척시키는 것과 미국의 테러 지원국 해제 과정을 진척시키는 것은 서로 같이 물려 가는 것입니다.

○이강래 위원 서로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연내에 되면 이것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불능화도 되면 이것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강래 위원 아까 장관 말씀하셨던 적대시 정책의 제일 핵심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습니다.

○이강래 위원 이것이 되면 미·북 사이에 상당한 신뢰가 구축된다고 봐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렇습니다.

○이강래 위원 그다음에 비핵화 로드맵 관련해서 몇 가지 제의를 하겠는데 불능화하고 핵 폐기, 불능화는 주로 시설 중심의 얘기이고 핵 폐기는 핵 물질하고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상당한 기술적 차이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북한의 핵 물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강래 위원 이 문제는 결국 신고 목록 문제에 같이 맞물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렇습니다.

○이강래 위원 아까 장관께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폐기하는 과정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통상 얘기하는 것은 물리적 과정을 얘기하는데 물리적 과정은, 폐기라는 것이 그것을 딱 이렇게 뭐…… 우리가 책상 하나 있으면 책상을 다 완전히 파기시켜 가지고 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못 쓰게 하는 것도 폐기니까 시간은 탄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강래 위원 지금 핵 폐기는 북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도 있고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리비아의 경우도 있고 남아공의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야말로 기술적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것과 정책적인 것이 다시 결합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강래 위원 물론 기술적인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능화 단계에서 성실한 신고가 되고 그 부분에 관한 신뢰가 확보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폐기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 크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과정이라기보다는 정책 결단만 수반된다면 얼마든지 시간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강래 위원님께서 말을 짧게 하라고 하니까 제가 대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폐기를 말씀이지요,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 놓고 못 쓰게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지만 그것을 폐차장에 들고 가서 완전히 갈아서 없애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정도의 폐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강래 위원 지금 우크라이나 방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미국이 사 가지고 가면 된다는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조금 급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강래 위원 저는 이 문제에 전제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결단의 문제이고 정책 결단의 주체는 우리나라가 물론 포함됩니다만, 바로 미국과 북한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습니다.

○이강래 위원 지금 미국의 정책 결단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미국은 북한이 핵 폐기를 하면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합쳐서 평화협정까지 가겠다는 정책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강래 위원 이번에 확인한 것이지요? 이번에 시드니 정상회담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이강래 위원 그동안 6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대표가 얘기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책 실무자의 입장이었는데 미국의 정상이 정식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습니다.

○이강래 위원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핵을 폐기하면,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에 같이 물려 있는 것입니다.

○이강래 위원 지금 부시 대통령의 이러한 천명은 언제까지 유효할 것으로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이것이 핵 폐기하는 과정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고, 분리시켜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강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장관님의 그런 식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임기 내에 그것을 하겠다라는 정치적 의지로 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당연하지요.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자기 임기 중에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지요. 다음 임기까지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강래 위원 길게 봐서 시한이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시한을 언제라고 정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고, 이것이 과거에 흘러온 과정을 죽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러한 장애 요인도 생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현 행정부는 자기 행정부 내에서 핵을 폐기하고 끝까지 종결을 짓고 싶다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강래 위원 저는 외교장관의 답변이 좀 사실에 근거해서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 12월 달에 있고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시한은 내년 이맘때까지밖에 없을 겁니다. 1년 내야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1년 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할 수 있겠다는 의제가 그것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가서 봐야 되는 것이지만 자기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지요. 제가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정직하게 안 한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이강래 위원 그래서 눈치 보지 마시고 평소에 생각한 대로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평소에 생각한 게 미국이 자기 현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도 끝내고 싶다, 그리고 끝낼 정책결정 의지를 내렸다, 판단을 내렸다라고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것을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강래 위원 그 점을 전제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부시 정부가 그런 정책적 결정을 한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국내외적인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라크 사태도 될 것이고, 또 내년 대통령 선거도 아마 염두에 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읽는 것은 부시 대통령의 지난번 시드니 표명이라는 것은 매우 확고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강한 원망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한국도 거기에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 내포돼서 우리 대통령께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문제 풀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해 달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분명히 입장을 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강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미국이 정해 놓고 한국이 따라간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정책의 결정이 나오기까지에는 지난 몇 년 간 한미 간에 상당히 깊은 의논을 하고 서로 공조를 해 오고 합의를 해 온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표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이야기한 그러한 서로 합의된 바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당연히 지금 이야기한 서로 합의된 취지에 따라서 북한에 핵도 폐기하고 평화체제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다자안보체제도 만들고 이렇게 하자는 것을 당연히 논의하는 것이지요.

○이강래 위원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사실은 표현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마저, 야당에서 대선 때문에 물러섰다고 이야기하는데 정국에 가위눌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굉장히 급한 상황 자체를 오히려 홀라당 잃는 게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것은 정치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관련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냉철하게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하고 안정을 위하고

우리 국가 전체의 장래를 위해서 그러한 돌아가는 정치 일정하고 관계없이 꾸준하고 착실하게 그리고 변동 없이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장관이 어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전부 칭찬하는 글, 칼럼 사설까지 나와 있고 하던데 저는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나 북한의 결단에 의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년 중에 그야말로 한반도 냉전체제에 빅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거기 보니까 주한미군 문제 이야기했고 또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한미연합사 문제, 또 그다음에 유엔군사령부 문제 죽 제기하는데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정부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옳은 태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화영 이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龍 委員 송 장관 수고가 많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왜 우리 국민들이 흔쾌하게 환영을 하지 못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마 장관은 아실 겁니다.

실제 정상회담이 우리 대선에 정략적으로 이용될 것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가 끝나 가는 대통령이 국민과 다음 정권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대규모 경제 지원 같은 것을 약속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걱정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6자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엇박자를 내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자회담의 지금 최우선적 목표는 핵 폐기가 맞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렇습니다.

○金德龍 委員 그런데 이번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해서 핵 폐기 문제는 싸움이나 하는 것 정도로 치부하고 외교 당사자인 외교부장관이 지금 수행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핵 폐기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사인을 준 것으로, 또 그렇게 결심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요새 대통령의 가장 관심사인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협정 문제가 남북 간 수뇌부만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휴전 당사자인 미국이나 중국이 제외된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선언으로 이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이것은 두 가지, 하나의 과정상 문제하고 결과라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만나서 종전,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할 수 없다는 그러한 자명한 논리적 차원의 문제가 하나 있고, 지금 질의하신 남북 정상이 만나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남북 정상 간에는 '자, 그러면 전쟁을 끝내도록 하자'라고 합의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또 관련된 나라가 있습니다. 우선 휴전체제의 당사자가 유엔입니다.

○金德龍 委員 실효적인 선언이나 협정이 사실상 두 정상만의 합의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金德龍 委員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문제의 선후 관계를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평화체제가 되면 그것은 뭐 선후가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德龍 委員 동시에…… 저는 그 문제는 장관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무슨 몇 분 몇 초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德龍 委員 어제인가 우리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평화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평화체제가 되면서 종전선언과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金德龍 委員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의 생각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을 제안할 생각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선언도 있을 수 있고 협상이 개시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어제 간담회의 장관 발언과 상충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엄연히 다른 이야기가, 상충되는 이야기가 같은 뜻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김덕룡 위원님, 대통령께서 "협상은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일련의 협상과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도 이것은 과정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다, 평화과정의 출범을 말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金德龍 委員 좋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까, 아니면 업적을 좀 남기겠다는 의욕이 많은지 몰라도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북핵의 폐기 문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장관은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니, 미국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핵화 과정을 보아 가면서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과정을 출범시키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한미 양 정상 간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金德龍 委員 그러면 앞서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답한 문제는 뭔가 좀 잘못된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것이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일련의 협상과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金德龍 委員 답변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실무그룹 회의 관계해서인데요, 지금 핵 프로그램 신고목록 작성, 불능화 방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진척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 계획은 신고할 것입니다.

○金德龍 委員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포함되는 것으로, 북한이 지금 그런 뜻으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북한이 이것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자기들이 신고하고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金德龍 委員 좋습니다.

아까 장관은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누누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정상회담 방북단에 외교부장관이 빠진 것은 남북 정상회담과 6자회담이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장관이 거기에서 배제됐는지 경위와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니, 우선 이것은 지금 말씀이지요, 외교장관이 간다고 그런다면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핵문제에 관해서 정상회담의 준비과정 그리고 진행 중·후에 있어서 핵문제와 관련된 역할을 그리고 기능을 외교부가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德龍 委員 알았어요.

외교부의 임무 중에 재외국민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것은 잘 아실 테고요, 이번에 대책본부 설치해서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하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어서 나름대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번 협상에 국정원이 개입하고 김만복 원장이 협상을 주도하면서 저는 외교부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꺾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국정원이 외교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외교부가 국정원의 하부 기관화되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런 납치와 같은 비정상적 상태가 생기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외교부와 그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다루는

국정원…… 다른 나라도 그 비슷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역할은 서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할 분담을 해 놓고 거기 틀에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金德龍 委員 좋습니다.

협상 타결 직후에 몸값 문제가 외국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장관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김만복 원장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탈레반과 약속한 게 있어서 밝힐 수 없다.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뒷거래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장관 말대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외교부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서 장관이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장이 실언을 한 것인지? 어느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공개적으로 그러한 거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없다고 했으면 없는 것입니다.

○金德龍 委員 그런데 김만복 원장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뒷거래가 없습니다.

○金德龍 委員 김만복 원장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를 했지요. "약속한 게 있어서 밝힐 수 없다.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기할 수 없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외교부장관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저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金德龍 委員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화영 김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최성입니다.

오늘 보고에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남북 정상회담이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표명을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최성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것은 상호 보완적으로 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그러한 설명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역시 보고에서 고딕체로 강조를 하시면서 "부시 대통령은 북핵 포기 시 김정일 위원장 등과 종전을 확인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할 용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이런 뜻을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렇습니다.

○최성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송민순 장관의 언급이 나왔는데 굳이 이런 식의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어떤 표현 말씀입니까?

○최성 위원 양 정상 사이에서 평화협정에 대해서 비중 있는 논의와 합의가 도출됐는데 굳이 장관께서 기자들과 함께 "평화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문제다." 이래서 모든 언론이 "송민순 장관의 말이 맞다." 그 말은 곧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위험한 인식을 한다.' 이렇게 몰고 가는데 이런 상황이 왜 진전됐다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언론이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 이야기는 당장 정상회담을 하면 그 자리에서 평화체제가 나오고 종전선언이 나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비핵화라는 과정 또 피스 프로세스라는 서로의 신뢰 구축 과정…… 신뢰 구축이라는 게 비핵화를 포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평화체제가 확립이 되고 종전선언도 같이 나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데, 제가 수차례 강조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최성 위원 다소 혼란스러운 판단을 가능케 하는 언급도 됐다고 봅니다.

북·미 간의 회담에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신고하면 미국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라는 이런 일련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고농축 우라늄만이 아니고 불능화 과정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핵 프로그램 신고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최성 위원 그렇게 되면 제 초점은 미국이 테러 지원국의 명단에서 삭제하는 부분들을 비중있게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이 북·미 간에 협의되고 있는 게 맞느냐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 두 가지 트랙은 같이 물려 가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알겠습니다.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데 언론의 협조는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아프간 피랍 문제 또는 북핵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습니다.

○최성 위원 그런데 얼마 전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 철거공사가 시작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국정홍보처가, 외교부라고 해서 건물에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부 전체의 기자실, 브리핑실을 국정홍보처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국정홍보처에서 주관하는데 외교부 장관께서 이것을 사전에 통고를 받았고 이 부분을 허락한 겁니까, 허락 없이 국정홍보처에서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이게 외교부가 허락하고 아니하고 할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요. 국정홍보처가 정부 내에 있는 기자실 전체를 같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외교부 출입기자들이 이번에 일련의 브리핑실 철거에 대해서 언론 폭력으로 규정을 하면서 문책과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 주무장관으로서 외교부장관의 입장은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문제의 주무장관은 외교장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정홍보처입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상관없이 그냥 국정홍보처……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이 그렇게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그것을……

○최성 위원 외교부의 출입기자들이 외교부 취재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조처를 요구하는데 장관은 주무 부처가 아니라는 것으로 그냥 방관만 해도 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방관이 아니고 이것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재 선진화, 이것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정부 내 차원에서 협조를 하고 또 언론과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기본적인 성격이 외교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취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든 주무부처가 아니더라도 외교부의 브리핑룸 철거가 외교부의 여러 취재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방법론, 취재 선진화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성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관께서는 외교부의 장관이시면서도 참여정부의 국무위원이시기 때문에 이런 조처는 이렇게 진행되도록 돼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 할 수 있는 그런 장관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북핵문제나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한 피랍문제 이런 사태에서 언론의 협력을 받으면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이라크 파병에 대한 연장동의안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적절한 시점에 이라크 임무종결계획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와 협의를 하고 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혹시 말입니다, 이번에 아프간 피랍 한국인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에 아프간에서의 조기철군을 요청하면서 이라크에서의 파병에 대한 1년 연장동의안을 혹시 빅딜하거나 맞교환하는 이런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없습니다.

○최성 위원 그러면 역시 일각에서 나오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을 지지해 주는 대신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연장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한미 실무라인에서의 협의나 논의가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없습니다.

○최성 위원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없습니다.

○최성 위원 김종훈 교섭본부장님, 우선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그 영전이 제대로 된 인사인가는 앞으로 한미 FTA가 제대로 된 추진에 성사 여부하고도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반적인 정부 분위기를 보면 좀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 연내 조기에 통과시키려는 이런 흐름들이 곳곳에 녹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미국 가서 미국 주미 대사관에 있는 고위 관계자 말을 들어도 연내에 미 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고 또 미국의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일각에서도 반대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미국의 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 과정을 보면서 연내에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내년 혹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정부로서도 한미 FTA의 추진을 위해서 또 불필요한 국론분열, 대책마련, 이런 측면에서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을 내년이나 차기 정부로 이양할 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이미 비준동의안은 제출이 된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최성 위원 왜 이렇게 서두르느냔 말이에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이게 공식적으로 제출되어야 국회는 국회대로 또 공식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내년이나 차기 정부로의 이양을 검토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정부는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 조속히 발효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타이밍을 언제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생각을 할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최성 위원 지금 한반도의 평화 지형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외교부가 북·미 수교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 개성공단 내 원산지 인정 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바뀌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내다보면서 몇 개월 늦추는 것이, 미 의회에서도 정상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굳이 개성공단의 어떤 앞으로 추가적인 여건의 변화만을 염두에 두고 타이밍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개성공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여건의 변화가 있었을 때는 그런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따로 있지요. 개정의 그런 방법도 있고요.

○최성 위원 지금 뼈 있는 쇠고기 문제, 그리고 특히 갈비뼈가 통째로 발견되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검역의 강화는 물론이고 쇠고기의 수입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추석을 전후해서 오히려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인 확대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상황 진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구체적인 사안은 지금 소관 부처인 농림부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일단 저는 미 측에 한국은 아직까지 광우병이 발생된 사례가 없는 국가이다, 미국은 그것이 컨트롤이 되고 있다는 OIE의 판단이 있지만 과거에 광우병이 발생된 사례는 있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의 사실을 놓고 어떤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장관님, 아프간 피랍 한국인의 석방 문제는 외교부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얻은 쾌거고 어떻든 두 분의 희생이 있었지만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외교부의 노고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후속과정에 있어서 국정원장의 과도한 언론 노출과 이런 부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외교부의 노력을 무화시킬 만큼 상당한 실책이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피랍 한국인 석방과정에서의 몸값 지불 문제에서 국정원장이 표현한 것하고 "제가 없다고 하면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적 표현이, 다른 데서는 외교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이렇게 단정적 표현을 써도 될 만큼 확실하

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없습니다.

○최성 위원 탈레반 인질이 이번에 라마단 특사로 석방이 됐고 특히 미군 공군기지에 있던 17명이 석방됐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피랍 한국인의 석방 과정에서, 탈레반의 석방에 어떻든 직간접적으로 협의되고 논의된 이런 측면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보다는 종전에도 라마단에 즈음해서 사면 이런 차원에서 석방이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 위원 끝으로 하여튼 언론과의 관계 문제는 참여정부가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대통령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참여정부가 고립화된 현상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들은 언론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추호도 언론 취재의 어떤 행보나 정책에 대해서 지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옳기 때문에 무조건 강행하는 이런 행태들은 수정되고 보완되지 않으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외교부가 오히려 좀 자유롭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전향적인 의견을 내서, 취재 선진화도 좋지만 언론의 협조를 받는 가운데 통일·외교·안보 정책이 추진되는 데 장관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고 대통령께도 직언을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뭐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교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화영 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흥길 위원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실 오후에 발언을 할까 했는데 최성 위원이 언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진영 우리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와 한나라당 소속 6명이 외통부를 방문했었습니다. 장관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브리핑룸 공사현장을 보고 정부가 취재 선진화 방안이라는 하나의 정책을 내걸고 이런 식으로 취재를 봉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참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외통부장관이 언론 관련 주무부서 장관도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간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최성 위원이 잠깐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외통부장관인 동시에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러한 문제가 국정홍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을 때, 혹시 청와대 측으로부터 보고가 왔을 때 당연히 문제점을 제기했어야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에서 외무부장관이라고 해서 완전히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우선해 두고 싶습니다.

아프간 인질사태 문제가 2명의 희생자를 제외하고 무사히 다 구출된 것에 대해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정부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성의 있는 태도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인질을 구출해 냈다는 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특히 인질 구출과 관련해 가지고 국내 언론이 전혀 현장에 접근이 안 됨으로 해서 외신보도에 따라서 일희일비, 특히 외신의 오보를 그대로 믿고 국내의 그 가족들이라든가 또는 국내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불안과 초조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물론 외신보도를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국내 언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현장에 접할 수 없었던 정책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통부에서 국내 언론에 아프간 취재를 직접 금지했던 게 사실이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렇습니다.

○고흥길 위원 금지한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위험지역에 보낼 수 없다는 그 이유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그 당시의 취재 현장은 가즈니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즈니 지역은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외신도 거기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불에 앉아서 취재하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카불에서도, 보셨다시피 독일 사람이

이번 인질사태 중에서도 납치되고 이랬는데, 카불 지역에도 현존하는 엄중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아프간 출입은 금지하면서 언론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외신들이 하는 것처럼 현지의 통신원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외신도, 지금 고흥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신도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오보도 많이 내고 또 이것은 성격 자체가 정확한 보도를 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언론이 쉽게 접근해서 취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걸 한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흥길 위원 지금 장관의 해명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적어도 국내의 풀기자단 하나 정도라도, 혹시 카블 대사관 주변에라도 가게 되면 그만큼 현장 소식이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처음에는 외통부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정례적인 브리핑이라든가 현장 소식이 전해지다가 언제부터인가 장관의 브리핑도 없어지고 아프간사태는 완전히 청와대 대변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우 잘못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외국에서 일어난 현지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답변을 하고 상황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어색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청와대가 한다면 그건 사실 마지막 보루나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외통부가 직무유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일부 언론사나 국민들 간에 없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경위가 어떤지 장관께서 간단히 해명을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 사건의 엄중성이나 국민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고 청와대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지금 청와대에는 또 일일 브리핑제도가 있습니다. 일일 브리핑 제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연 질문이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됐고요.

또 외교부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1주일에 한 번씩 브리핑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기자들이 "통합 브리핑실로 마련해 놓은, 청사 1층에 있는 기자실에서는 브리핑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수시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브리핑을 해 주고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상황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흥길 위원 아프간 사태가 한참 진행 중일 때는 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때에는 외통부 출입 기자단이 정상적으로 취재를 했고 정상적으로 브리핑을 했던 상황이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중간쯤 그렇게 됐고, 그때 이미 1층 기자 브리핑실이 그러한 과정에 중간에 마련이 됐습니다.

○고흥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국내 보도진과 정부 당국 간의 매끄럽지 못한 대언론 관계 때문에 빚어진 하나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청와대가 브리핑을 함으로써 생기는 대외적인 이미지라든가 또는 국익의 손상 부분은, 국정원이 물론 대통령 직속기구이기는 합니다마는, 국정원장이 현장에 가서 지휘하고 또 선글라스 맨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하면서 청와대가 또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일일이 함으로써 사실 외국에서 '아, 이것은 한국 정부가 특히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이 직접 컨트롤해서 테러단체들과 협상도 하고 무슨 딜도 있었다' 하는 오해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절대로 협상은 없었고 뒷거래는 없었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국민 누구도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외국에서의 발언들, 관계자들의 얘기가 한국 정부의 뒷거래 내지는 테러단체와의 직접 협상을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 아실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9월 1일 날 직접 협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관련된 기자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사태와 관련 국제사회의 규범 및 관행과 무고한 인명을 구해야 한다는 절대적 가치를 잘 조화시키려 노력했고 국제사회도 이를 잘 이해할 것이다." 이 말씀은 사실상 뒤를 캐 보면 부인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한 뉘앙스의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국제관례를 깨고 테러단체와 직접 협상을 벌였다."…… 그래서 인질

구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그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장관의 국제사회에서도 이해할 것으로 본다는 그 뉘앙스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더 의혹을 일으키지 않았는가?

이해한다고 보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으신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해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했다 하는 부분도 국제사회가 이해를 해 주어야 되고, 또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을 강구했다 하는 것도 국제사회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다른 나라의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두 가지 점을 다 강조했습니다. 목숨이 위험에 처한 사람도 살려야 되고 국제사회 규범도 같이 지키려고 했다, 이런 점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고흥길 위원 북핵문제와 정상회담에 관한 것은 시간 관계상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화영 고흥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아직 질의를 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천 위원 최재천입니다.

대테러 관련해서 몇 개 묻고 시작할게요.

지금 대테러 관련 테러 방지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훈령 47호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국외 현장 대응은 전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의 주무이고, 그다음에 관계 기관별 임무에서도 국외 사건의 모든 운영, 사실상 협상, 보호 이런 것들은 외통부 업무이고, 국정원은 정보 기획·조정 이 정도 업무만을 담당하는 집행과 정보 수집·분석 기능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 정부조직법의 취지도 마찬가지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최재천 위원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부조직법이나 그다음에 테러에 관련된 최상급 법령인 대통령훈령에 이번 아프간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위반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건 위반 이것보다도 상황에 맞게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테러를 보통 이야기할 때 통상적인 테러의 경우와 납치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구해 내는 경우를 딱 일률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업무 분장을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탄력성은 인정을 하지만 참여정부가 늘 자랑했던 게 "외교·안보 각종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었고, 우리는 철저히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시스템 정부다." 이걸 일관되게 자랑해 왔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적을 합니다. 저도 그 신축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만 우리 장관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을 국정원이 주도해서 성사시켰을 때 외신 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국정원은 자기들이 집행기관인 줄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요?

○최재천 위원 예.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외신 기자들하고요?

○최재천 위원 예.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한 건 아닌데……

○최재천 위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고 난 다음에.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최재천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외신 기자 회견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최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발언을 누가 한 것이지요? 7·4 남

북 공동성명을 예로 들면서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정원은 자기들이 집행기관인 줄 알고 있다, 이렇게 한 발언이 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니, 저는 우선……

○최재천 위원 제가 발언록을 가지고 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요?

○최재천 위원 그러면 적절한 시기 때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최재천 위원 일단 놔두고요.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민간 병원을 지어 주기로 되어 있다고, 일부 민간 베이스로, 원장이 이런 것을 시인했는데 KOICA 예산을 통한 간접 집행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민간 병원 집행하는 걸 무슨 KOICA 예산…… 우선 민간 차원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가 없습니다.

○최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도 멈추고.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올해 미 국무성 초청 리더십 프로그램에 저 혼자 초청받아서 가서 미국의 대한반도 관련 인사들 약 80명 정도를 1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났는데 NSC나 한국 관련 일하는 분들은 다 뵈었는데, 그때가 이미 7월 하순인데, 물론 비공개회의였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은 철군키로 했고 이라크는 연장키로 했다.” 그때 저한테 이미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긴가민가해서 와서 가까운 분들에게 이야기는 했지만 원래 비공개를 전제로 한 대화라서 그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이를테면 이런 적이 있습니다. 4월 9일 날 북미국장이 일부 기자들 네 사람을 모아 놓고 저녁 식사 때 “북핵 해결을 위해서 양국 간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6개월에서 최대한 1년 정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6월 1일자 국방 관련 소식통은 “김장수 장관과 게이츠 미 국방장관 양자 회담에 자이툰부대 주둔 기간과 미군기지 반환 문제가 의제로 잡혀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안보장관 관련 회의에서 6월 중에 이미 아프가니스탄은 사실상 철군하기로 하고 이라크는 연장키로 하는 방향이 잡혔고, 그래서 7월 달에 아프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우리는 이미 아프간에 대해서는 철군 계획이 서 있다, 국회에도 보고했다, 그리고 김성곤 국방위원장의 말을 빌어서 공개리에 사실상 그 문제를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미 6월에서 7월 초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내부지침이 잡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위원님, 이건 금년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자이툰, 그러니까 이라크를 1년 연장할 때 이미 작년 연말에 금년 중에 그러니까 2007년 말까지는 아프간은 철수한다, 그리고 이라크는 임무 종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금년 중 보고를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재천 위원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 중으로 그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국방부나 외교부나 정부 안보 부처 사이에는 최소한 6월 전에 그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의사결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없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어떤 의사……

○최재천 위원 이라크 문제를 연장할지 어쩔지에 대해서.

없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공식적으로 그게 내부적으로……

○최재천 위원 그러면 국회에 6월 달까지 보고하기로 한 건 그냥 뭉개 버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뭉개지 않고 그러다가 그것을 하반기로 늦추었지요, 보고하는 것을.

○최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아프간은 작년에 이미 2007년 말까지 철군한다, 이렇게 그때 국회에 되어 있었습니다.

○최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왔고 그렇게 흘러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6자회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6자회담의 성공을 전적으로 바라고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안보 공동체로 이어지는 그런 연계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이 철강 공동체로 시작을 해서 사실상 정치 공동체로 해서 가듯이 우리도 안보나 에너지 공동체로 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의 6자회담은 저는 북·미 양자 대화를 사실상 추인하고 있는 형태, 본격적인 의사결정 기구라기보다는 사실상 추인하고 가는 형태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면 문제는 북·미 관계의 진전만큼 남북 관계의 진전이 전제되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남북 정상회담을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북·미 양자 대화의 진전 속도만큼이나 남북문제를 통해서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는 6자회담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주문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일본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평화 프로세스를 밟다 보면 유엔안보리가 50년부터 밟아 온 대북 관련 제재 결의들이 종종 있는데…… 82, 83, 84, 85, 88, 95, 이런 것들이 대북 관련 제재조치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제 문제나 재해석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자회담 내에서 우리의 내부적인 대화를 강화하고 남북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평화 프로세스에서 필연적으로 도래될 안보리 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안보리 외교,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대한 좀 더 밀도 깊은 그런 외교가 진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화체제에 대해서 오늘 사설이나 시론들을 죽 봤는데 경향신문 사설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용어나 개념이나 절차에 대한 우리 사회에 혼선이 있습니다. 저는 평화체제 개념을 프로세스 개념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전제해야 될 게 평화체제를 분단 고착적인 평화체제로 해석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저는 북·미 양자 대화 진전도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남북 관계의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평화체제 개념을 평화 지향적인 프로세스, 절차, 흐름의 개념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단계를 자꾸 끊어 버립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임동원 장관님이랑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아태평화센터에서 남북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거나 제가 거기에 조금 덧붙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통일 지향적인 평화 프로세스가 되어야 된다는 원칙이 확인되고, 두 번째는 맨 처음에 선언적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언적 조치는 당연히 남북 사이에 선언적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4개국 공동선언이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평화 프로세스를 끌어갈지에 대한 합의나 협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물리적 조치들이 있어야지요. 이것을 실질적 조치 혹는 물리적 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때는 당연히 북·미 관계가 진전되어야 되고 북핵 해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는 경제 공동체나 그다음에 민간 교류가 확대되어야 되고 군비통제가 진전이 되어야지요. 저는 도리어 이명박 후보께서도 최근에 군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유엔사의 역할과 지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동북아 전체의 안보 틀을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이렇게 재래식 군비경쟁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들어서 그토록 비판한 전략적 유연성 이 개념이 도리어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막무가내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여지가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역시 절차적인 문제로 제가 비판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고 LPP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작통권 환수도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있어서 대단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군축이나 정전협정에 대한 준수 문제 등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 조치, 실질적 조치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과 제도적 조치가 마지막으로 평화협정의 단계가 되는 것이지요. 과거 청산해야지요, 남북 사이에도. 정전협정 폐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가 있고, 그다음 무력 불사용이나 경계선 문제나 WMD 문제나 그다음 화생방 무기나, 그다음에 어떻게 이 남북사이의 평화를 감시할 것이며, 그다음에 초기 단계인 남북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북한은 물론 연방제를 주장하겠지만), 이런 선언적 조치

에서 실질적 조치로 그리고 법과 제도적 조치로, 선언에서 구체적인 협정이나 약정으로, 조약으로 이런 긴 프로세스인데 어디 한 단계만 딱 뽑아내 가지고 당장에 뭔가 이루어지고……

평화의 개념을 자꾸 오해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우리 야당은 비핵화에 중심을 둔 평화 개념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온건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민간교류가 확대되고 전쟁의 위험성이 없어지고 상호 확충할 수 있는 점진적인 군축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평화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평화의 개념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글을 하나 쓰려고 초안 잡다가 놔둔 것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고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자간담회 내용하고 송민순 장관 12일 외교통상부 출입기자오찬간담회…… 이 말씀은 맞아요, 송 장관님 말씀도. 일반적으로 평화조약, 평화협정, 종전선언 모두가 전체의 평화체계다, 맞는 말씀이에요. 프로세스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뒷부분이 조금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선언하는 것은 문제다. 갑자기 종전 선언을 하면 전쟁은 끝나지만 평화는 없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것” 그래서 평화의 개념에 대한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계부처나 여러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개념, 평화의 문제를 절차적인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종결된 현재의 정적인 정태적 상태로 파악하느냐, 이런 데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토론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사적인 말씀 한 가지 드리자면, 제가 국감을 당연히 여기서 하고 싶지요. 자료도 많이 제출해 놓고. 그런데 오늘 또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당에서 하도 법사위로 가라고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아마 여러 외교부 관계자들을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뵙고 끝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심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처를 드리거나 그다음에 제가 워낙 순간적으로 매섭고 날카로운 성격이어서 아픔을 드린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최재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를 포함한 외교부 직원들에게 좋은 의미에서 자극적인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제가 대통령께서…… 지금 최 위원님께서 죽 이야기하신 그 과정이 전체 과정의 틀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뭘 하다 보면 사이사이에 조금 앞뒤 순서가 안 맞을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것하고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같은 틀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또 들으면서 이야기하다 쓸 때 조금 민감하게 바꾸어 쓸 수도 있기는 있지만 같은 틀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재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원 위원 장관님, 제가 이 동네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전문성도 없고 비기너(beginner)가 함부로 하다 보면 큰일 날 것이고 해서 아주 쉽게 물을 테니까 장관도 쉽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아까 고흥길 위원도 얘기하던데 브리핑룸 하는 데를 가 봤어요. 가 보고 느낌이 큰일났구나! 취재 선진화 방안인가 뭔가 해 가지고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국비 55억인가 예비비를 써 가면서 그것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제가 가 보니까 무슨 소규모 세미나실이야.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기자들은 주는 대로 받아 가거라, 보태지도 빼지도 말아라……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심대한, 아까 장관이 쓰기 좋아하는 ‘명백하고 현존한’ 언론의 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선진국으로 가는 게 어려우냐 하면 국무회의 석상이나 장관들 모임 자리에서 ‘그것 하면 안 됩니다!’ 옛날 이조왕조시대 때도 그랬어요. 불가를 주장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된다는 얘기 없이 꾸역꾸역 알아서 하는 것 보니 이 나라가 좀 한심하지 않나 싶은데, 특히 외교부에 종합 브리핑실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장관님이 한 번쯤 대통령께 안 된다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외교부의 직원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엘리트 중의 엘리트이고 국제 감각이 탁월한 직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침묵하는 것을 보고 나는 나라 장래가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언론취재 이것 말씀이지요? 정부 내에서 관련되는 장관들이나 관계관들이 많은 토론을 거쳐 왔습니다. 그것을 국무회의 석상에서 '뭐라 이야기가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고 죽 협의를 해 가지고 취재 선진화…… 취재 선진화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주무장관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한 그것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언론이 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화가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 관련 부서 간에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원 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아까 외교문제에 대해서 NLL 문제, 남북 정상회담 문제, 그다음 최근에 장관의 발언 문제에서 얘기가, 대통령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어쩌면 나보다 못할지 몰라요, 외교 문제나 핵문제나 언론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오기로 막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임기 말에? 대못질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런 대통령이라면 소위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인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레이맨(layman)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얘기를 금과옥조로 받들고 이래 가지고야 어찌 나라 꼬라지가 되겠습니까?

나는 바로 대통령의 얘기에 '노'라고 얘기하는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가 없다는 것이 최근의 이 혼란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 주면 안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저도 쉽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는 취재 선진화 취지에 국무위원들이 다 동감을, '다'라고 제가 대표할 수는 없지만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방법을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죽 협의를 해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광원 위원 그다음에 통상본부장님,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팀 그로스 대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업외교가 영어 잘하는 사람은 농업을 모르고 농업을 아는 사람은 영어를 몰라 가지고 소위 농업외교의 전문성 결여를 깊이 얘기합디다.

그래서 나도 그 점이 우려돼요. 제가 같이 제네바 갔을 때도 대사관 직원이 나와 통역을 하는데, 요새 농업이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통역을 못해요. 그것을 보고 전문가를 키워야 된다는 팀 그로스의 충고가 적절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당초 미국하고 FTA 할 때 부속서에 영토 관계에 대한 도서조항에 엑서사이즈(exercise)라고 썼잖아요? 썼다가 나중에 메이 엑서사이즈(may exercise)라고 바꿔 놨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 두 차이는 뭐예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광원 위원님께서 농해수위 위원장도 역임을 하셨고 해서 그쪽 분야에 아주 고견이 계시다고, 제가 평소에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 영어 전문성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농림부도 UR을 겪어 오고 국제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고 하면서 농림부에도 국제회의장에 내세워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협상력을 갖춘 직원들이 많이 배양되어 있습니다, 아직 숫자가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최근의 그런 발전을 평가하고 싶고요.

그다음 영토조항인데요, 미국이 자기들의, 특히 EEZ 200해리에 해당되는 해역에 대한 주권적인(주권은 아닙니다) 권리를 어디까지로 하느냐, 그 권리를 '메이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데까지'라는 것이 미국이 죽 써 오던 문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엑서사이즈라는 것을 놓고 어느 쪽이 더 좋은가를 비교해 봤더니 저는 메이 엑서사이즈로 가는 것이 훨씬 우리의 재량권을 높이는 데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안에다가 한국의 주권적 권리를 엑서사이즈 하는 데에……

○김광원 위원 알겠습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경계를 그으신다 하면 그것이 요건이 되고요, 메이 엑서사이즈가 되면 우리가 우리의 주권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만 하면 거기가 우리 영역이 되는 것이지요.

○김광원 위원 독도 영유를 우리말로 실효적 지

배라고 하잖아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예.

○김광원 위원 일본은 자기 영토라고, 국회속기록을 보면 전부 자기 영토입니다. 일본이 독도에 들어가다가 한국이 공격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도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정도예요. 국회속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눈치 봐서 미국이 메이 엑서사이즈를 요구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덜컥 받은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김광원 위원 미국이 다른 나라하고 체결할 때 엑서사이즈입니까, 메이 엑서사이즈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메이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원 위원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던데……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아닙니다. 메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원 위원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만 요구하고 FTA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FTA 서명본하고 지난 5월 25일자 공개본과는 달리 EEZ 대륙붕 조항이 수정된 것과 관련해서 한국이 수용하기로 한 대외경제장관회의록 등 관련 회의록 사본 이것만 좀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것은 정부의 문서공개에 관한 법률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원 위원 그렇게 적어 주세요. 문서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못 내놓겠다 하면 난 또 대응할 테니까요.

다음에 참고로 이것은 답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개방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얘기는 공업 분야지요? 농업 개방이 경쟁력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농업이 소위 규모나 모든 면에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게 우리 농업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농업이 앞으로 미래생명산업이라면 철저한 보완대책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 거듭거듭 실패해서 112조 뭐 어쩌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 투융자 다 보태 가지고…… 그것은 정말로 정부 차원에서 농업인을 속이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이 정부가 그런 것은 대못질하고 나가도 나는 말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또 송민순 장관님께 돌아가는데 '비핵화'라는 말하고 '핵 불능화'하고, '핵 폐기' 세 단어의 차이는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핵 불능화 과정을 거쳐서 핵 폐기를 거치고 그것이 다 되면 비핵화가 완성이 됩니다.

○김광원 위원 3단계로 갑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은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리는 핵 폐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비핵화로 가는 것이지요.

○김광원 위원 6자회담에서 기대하는 성과는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6자회담은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김광원 위원 그다음에 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비핵화입니까, 핵 폐기입니까, 불능화입니까, 노 아이디어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비핵화지요, 비핵화.

○김광원 위원 그런데 노 대통령의 어록을 보라고요. "핵은 자위수단이다. 한국을 공격하기에는 너무 가깝고 미국에 가져가기에는 너무 멀다." 그러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대통령 말이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러나 대통령의 전체 말씀은 비핵화입니다.

○김광원 위원 전체 말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편린을 보면 전체를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루어 짐작건대, 대통령은 "북한에 핵을 가지도록 하고 나머지는 없애도 모르겠다." 자위수단이니까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그런 어정쩡한 상태로 이번에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핵문제는 6자회담에 맡겨 놓고 거론 안 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까? 그것 거론하면 싸우러 가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안 꺼내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과정은 기본적인 협상의 장이 6자회담에서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진전을 도와주는 모양이 되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고받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김광원 위원 시간이 돼서 더 이상 안 묻고 끝내겠는데요.

김정일의 핵에 대한 생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알아야 전략이 섭니다. 비핵화는 우리가 가진 카드예요. 그러기를 아이 호프 소(I hope so)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얘기이지 안 들으면 그만 아닙니까? 김정일 생각은 장관께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김정일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관계없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김광원 위원 그게 언제쯤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사실 지금까지 과거 역사를 보면 앞으로도……

○김광원 위원 아무도 모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러나……

○김광원 위원 아미티지 보고서는 절대로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불능화는 마치 핵 만드는 시설을 못쓰게 만들겠다, 그 대신 가진 핵은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뜻으로 나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미티……

○김광원 위원 제가 비전문가라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들려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6자회담은 아까 어떤 한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아주 극히 위험한 상태다. 그렇다면 장관, 미국이 북한 핵을 굳이 비핵화로, 핵 폐기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핵무기나 또는 핵무기를 만드는 물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전 세계적 전략에도 맞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하고 무슨 거래를 해서 그것을 기정사실화시킨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지요.

○김광원 위원 제가 좀 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미국이 가진 생각은 그럴 것 아닙니까? 소위 세계 핵질서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북한이 가지면 우리도 가져야 될 것이고 대만도 가지고 일본도 가질 것이고 소위 핵질서, 인류의 재앙이 예견되기 때문이라고 봐서 미국의 생각이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같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뭐 범죄집단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조직이 핵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회담에 임할 때 정상회담에 가지고 갈 의제들이 있고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의제들이 있습니다. NLL 같은 것은 절대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될 과제거든요. 이런 것을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마구잡이로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인데, 그거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듭을 짓는 얘기를 하면 장관이나 외교부의 관료들은 다른 부처의 관료들하고는 특히 다릅니다. 다른 나라도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소위 선진화그룹이에요. 그 그룹에서 조금 국가이익…… 나는 미국하고 북한하고도 국가이익이 최우선해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바르게,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좀 진지한 검토를 해서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외교부도 언론 선진화 방안에 동참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지금 외교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가 거기에……

○박희태 위원 오늘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러 갔었지요? 외교부 방문 안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방문한 것으로 압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면 만나 보지도 않은 모양이네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이게 외교부 차원에서 선진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정홍보처 전체……

○박희태 위원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장관이 만나 보지도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무슨 따로…… 저는 국회에 출석하러 나오고 아마 의원님들 오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오는 줄 알았을 텐데 일부러 피

한 것 아니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굳이 일부러 피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박희태 위원 뭐 겁나는 일을 한 모양이구만? 그것은 언론 선진화 방안이 아니고 후진화 방안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역사적인 조치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괜히 역사 한 페이지에 송 장관도 거기에 동조했다 이렇게 이름이 안 오르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의제를, 의제가 어떤 의미에서 없다고 할 정도로 폭넓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는데 북한의 개혁 개방에 관해서 논의를 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북한의 개혁 개방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과 교류를 많이 하고 접촉을 하는 그 자체가 결국 결과적으로 북한이 받아들이고 할 만한 수준의 그러한 적절한 방식의 개혁 개방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지금 북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또 북한의 사활이 걸린 문제는 바로 개혁 개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 문제는 북한 스스로 그것을 사활로 생각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희태 위원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상해의 천지개벽을 직접 목격하고 큰 감동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배고픔에서 허덕이던 중국의 10억 인구를 완전히 배고픔에서 해방시킨 게 바로 중국의 개혁·개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저렇게 발돋움하고 있는 것을 어째 북한이 바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또 전통적인 우방인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지 않는 한 북한이 세계 제일의 가난뱅이 국가를 면하지 못하고 정말 눈물 나는, 우리 동포들을 굶어 죽이는 데서 해방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개혁·개방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조그마한 이런 것, 개성공단이니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본격적인 개혁·개방으로 나서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것을 촉구하고, 권유하고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데 대북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고 또 북한에 대한 모든 경제협력도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개혁·개방만 되면 구태여 정치적인 통일이 안 되더라도 마치 한 나라와 같이 됩니다. 지금 중국 대륙과 대만을 보십시오. 마음대로 자유왕래, 자유 투자, 자유 교역, 자유 결혼…… 한 나라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의 분단의 아픔도, 분단의 고통도 다 없어집니다. 정치적으로만 통일이 안 되었다 뿐이지 경제적·사회적으로는 통일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또 그리고 북한에 가장 이로운 개혁 개방에 대해서 무신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북한도 그것을 알 것입니다. 왜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북한이 나름대로 자기 체제 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박희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남북 간의 교류와 접촉을 많이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개방하는…… 그렇게 바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교류를 하려면, 우선 물건을 주고받고 사람도 오고가고 하려면 문을 열어야 되고, 문을 연다는 것이 개방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박희태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개방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한번 중국을 보십시오. 그런 정도로 자유롭게 투자도 하고 왕래도 하고 이렇게 돼야 개방이지, 그것을 또 받아들일 정부 체제와 자세를 갖추고 이래야지 지금 무엇이 개방이 됐습니까? 개혁은 더더욱 안 됐지요.

지금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그 참혹한 아사 상태를 늘 보이고 있는데 중국에서 어떻게 해서 국민들을 배불리 먹여 살리는지를 알았을 것 아닙니까? 농업 생산 방식을 집단적인 생산 방식에서 개인 생산 방식으로 바꾸는 개혁만 있으면…… 중국에서의 그런 보고를 보면 그런 개혁을 했을 때 10배의 생산량이 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농업부터, 또 경제협력과 투자를 받아들이는 자세부터 중국에 좀 배우라고 하세요. 그렇게 왜 우리를 따라오라 합니까?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왜 개혁 개방을 못 하느냐? 장관이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체제가 붕괴될까, 김정일 체제가 붕괴될까 겁을 내서 그렇습니다. 세계가 다 아는 일 아닙니까?

동구라파가 개혁·개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권이 쓰러지고 참혹한 집권자들의 말로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공포에 대한 생각을 없애게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무조건 개혁·개방으로 나오라 하지 말고 개혁·개방을 하더라도 이웃나라 중국처럼 그대로 공산체제가 유지된다 그리고 베트남도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외국의 예를 들면서 공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도 노력하고 또 외교부에서 국제적인 노력을 해서 미국이든 또 중국이든 주위의 어떤 나라도 절대로 체제 붕괴는 안 시키고 그대로 현재의 정치체제가 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개혁·개방을 안 하겠습니까? 그 길만이 좋은 길이고 살 길인 줄 아는데.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외교정책이 나아갈 가장 중요한 길이고 통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위원님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와 속도, 이런 방식으로 개방이 되고 개혁이 되는데 바로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나니까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앉아서 '이것 이리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힘껏 도와 드리겠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이런 게 정상회담이지 어디 언론에 공표를 하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비밀 외교는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다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고 또 비공개적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권유를 하십시오. 이번에 외교장관은 북한에 안 가신다고 그러는데 시간도 있고 하니까 대통령께 좀 권유하십시오. 서로 살 길을, 우리 민족이 정말 번창할 수 있는 길을 자손대대로 우리가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를 무대로 뛸 수 있는 길을 왜 이야기를 못 합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좀 길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벌써 다 됐다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두 정상이 만나면 종전선언을 할 것이다, 평화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에서는 자꾸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태 위원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박희태 위원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하자 하는 것은 북한의 끈질긴 요구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박희태 위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종전선언을 한다, 그다음의 북한 수순은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수순이 어떻고 간에 지금 당장 그렇게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이 바로 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박희태 위원 또 가 가지고 얼른 해 버리려는지 어떻게 알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웃으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태 위원 도대체 나는 가장 예측 불능이, 현 정권이 하는 일련의 대외정책도 그렇고 또 국내정책도 그렇고 예측 불허예요, 예측 불허. 그래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전반적인 틀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죠. 그것을 무슨 예측 불허의 상태로 그냥 느닷없이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다음의 수순은 제가 볼 때는 평화협정이 체결됐으니까 이제 전쟁도 종결됐고 미군은 한반도에 더 이상 주둔할 필요가 없다, 이러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다 적절한,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로 나오는 것이죠.

○박희태 위원 그래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할 수 없이 미군이 철수 안 할 수가 없는 단계가 돼 떠나고 나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했던 근간인 남북 간의 소위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가 확보되기 때문에 꼭 6·25 전에 북한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에서 남침을 감행했듯이 그런 달콤한 또 50년래의 북한의 변함없는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고 또 북한의

압도적 군사력 이런 말씀은 정책과는 관계없이 사실 면에 있어서도 지금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박희태 위원 무엇이 아닙니까? 지금 미군의 부재를 전제로 해서 우리 한국군이 북한의 무력을 압도할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군사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의가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박희태 위원 국방장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신다 이런 말씀인가?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평화 유지의 근간인 무력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다, 힘의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사코 지금 북한 핵을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평화협정 운운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겠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야기 안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박희태 위원 어허,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표현이. 얼굴 붉힌다 했나 싸움난다고 그랬나. 그렇게 벌써 미리 겁을 내 가지고 무슨 정상회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대통령한테 겁내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북한 가라고 이야기 좀 하세요. 장관 또 옆에 모시는 분들이 대통령한테 자꾸 좀 용기를 줘야 돼요, 용기를. 겁먹지 말고 김정일이하고 한판 붙으라고 좀 이야기를 하세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오후까지 이렇게 질의에 응해 주시느라고…… 송민순 장관님과 김종훈 교섭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아프간 사태 결과에 대해서, 우선 그만큼 21명을 무사히 돌아오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합의사항이 발표가 됐어요. 탈레반 단체와 우리가 만나서 협상한 합의사항이 발표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테러단체와 합의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나요, 국제사회에서?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리가 협상을, 정부가 협상을 하지를 않았고, 따라서 정부가 거기에 무슨 직접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하지를 않습니다.

○진영 위원 아니, 청와대에서도 이런 얘기 했는데요. 석방 조건과 관련해서 철군과 선교 활동 중지 외에는 없다, 그런 조건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런 조건인데 정부가 나서서 합의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

○진영 위원 그러면 이 합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무슨 얘기를 했든지…… 그런 취지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정부가 협상하고 정부가 합의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진영 위원 제가 정부가 협상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다 갔잖아요. 간 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 부분을 주도한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제가 세 번째 항에 대해서 부적절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세 번째 항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진영 위원 한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은 더 이상 아프간에 오지 않는다, 문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선교 활동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전에, 합의가 되기 전의 말씀이죠. 그런 합의든 뭐든 간에 그런 것이 있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아프간 지역에 대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선교든 아니든 관계없이……

○진영 위원 여행 금지……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프간은 입국 금지가 돼 있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겠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선교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은……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선교 활동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진영 위원 저는 이것 합의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지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러한 합의가 되면 앞으로 한국 사람은 전부 타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탈레반이나 그쪽에서 선교 활동 오는 것을 반대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항상 이런 요구를

할 것이고 말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인질의 유혹을 받게 돼 있다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가사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누가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발표된다든지 그런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든 장사든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입국이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다 되는데 그중에서 선교만 안 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치는 사실 석방 훨씬 이전에……

○진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발표되는 것은 너무나 테러단체에 굴복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고, 그 후에 올 수 있는 어떤 파장이 클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정상회담에서, 오늘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비핵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서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이 마치 남북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주 협상장이 6자회담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위원 예, 그것 뭐…… 그것 다 알고 있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래서 그것을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6자회담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와서 남북 정상 간에…… 비핵화 협상이라는 게 지금 주고받는 협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고받는 식의 협상을 할 성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진영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6자회담에서는 잘 되도록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진영 위원 제 얘기를 한번 좀 들어 보세요.

자꾸 이것이 싸움을 하라는 것이냐 아니면 갈등을 조장하는 주장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한반도 평화체제가 되려면 6자회담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맞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진영 위원 6자회담의 핵심적 당사자가 지금 북한과 미국이잖아요? 북·미 합의에 따라서 6자가 거의 보조를 맞춰서 가는 이런 상황인데 북한의 6자회담에서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북·미 관계 정상화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요구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진영 위원 미국의 요구사항의 핵심이 비핵화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가게 돼 있다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북한의 요구사항인 북·미 관계 정상화가 없이는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비핵화 없이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동전의 양면과 같은 2개의 축이 6자회담의 핵심이고 이것이 성공하지 않고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어려웠던 게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면 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고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도와주는 것 아니냐 말이죠. 그러면 비핵화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 도움이 되는 얘기인데 비핵화 얘기 하면 마치 이것이 남북 간에 무슨 갈등이나 더 생기게 하는 것 같은 얘기같이 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는 또 그것과 다른 차원의 얘기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은 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래서 저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명확한 질의를 주셨고 저도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의 뜻이나 정부의 생각은 남북 관계의 발전과 비핵화 이것은 서로 선순환적으로 서로 도와주는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이 만나서 6자회담에서 주고받는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거기에서 할 성격은 아니다, 그것은 6자회담에서 가고 있는데, 그러한 비핵화가 잘 되고 그래야 북·미 관계 정상화도 잘 간다는 것은 북한이고 우리고 잘 아는 것입니다. 또 같이 더불어서 남북 관계도 잘 가야 이것이 전체적으로 비핵화,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수립, 이러한 관계를 다 갈 수 있다는 그런 큰 맥락에서 분명히 대통령이 북측 지도자와 그것은 대화를 할 것입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폭넓게 모든 의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꾸 이것이 무슨 6자회담에서 할 일이고 여기에서 논의할 성질이 아니라는 자체가 이미 그것은 한계점을 자꾸 긋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넓게 다 따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없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진영 위원 다음에 아침에도 우리 이강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불능화조사단 갔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진영 위원 우리가 못 갔단 말이에요. 못 간 것인지 안 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못 갔단 말이에요. 아까 장관님께서 설명하시기는 "그것은 핵보유국에서 가는 것이고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능화해 놓으면…… 지금 핵 시설 3개 불능화하는 것 아니에요, 영변에 있는 것?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진영 위원 3개 불능화해 놓으면 또 언젠가 해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6자회담에서 당사국들이 해체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합의 없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기본적으로 핵을 포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핵을 포기하면 그 포기의 개념에 불능화하고 그것을 폐기하는 과정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영 위원 우리가 원래는, 송 장관님 저희가 인준할 때는 반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아주 야무지게 여러 가지 뭘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 당연히 우리 가야 돼요. 우리 땅에 서 있는 것이고 앞으로 불능화 조치를 취하고 나면 핵 시설이 지금 오염물질로 남는 것 아니에요? 불능화라는 것이 불가역적인 것 아닙니까? 어차피 못 쓰게 만드는 것이 불능화인데 나중에 해체하려면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고 말이지. 이것이 핵무기 핵탄두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핵 시설 불능화 조치, 우리 땅에 있는 것이고 우리도 비용 다 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핵 시설 불능화 조치 할 때는. 가서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되고 불능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불능화된 뒤에 해체하는 것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 그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불능화 조치 단계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야지, 이것이 미국과 북한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가 가고 싶은데 못 간 것인지 아니면 양보를 해서 못 간 것인지 모르지만 이럴 때는 저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우리 송 장관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럴 때 설득을 해서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선 현재 NPT 국가이면서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세 나라가 가서 무슨 조사를 하고 6자회담에 보고를 해 오면 앞으로 우리한테 먼저 올 것입니다, 내일. 내일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죽 해 줄 텐데 그러면 그것을 죽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봐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저도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또 현실적으로 그러한 6자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너무 양보하지 마시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뭐 양보할 일 없습니다.

○진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해야지, 94년도 제네바 합의처럼 우리는 앉아 보지도 못하고 돈만 많이 내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하지 말고……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제네바 합의하고는 의사결정 구조나 집행 과정이 전적으로 같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에서도 자꾸 밀리게 되면 또 다른 데에서도 자꾸 밀리게 되니까 처음부터, 송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하실 것 같은데 잘 좀 하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알겠습니다.

○진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석 위원 저도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프간 피랍사건을 겪으면서 정부가 참 곤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정부가 꼭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충돌하니까 참 난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자국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지요. 동시에 테러단체와 협상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테러를 막기 위한 조치이고 보면 참 난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가 협상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생각해 보니까 참 곤란한 문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해서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고 또 주변국에 설명하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선택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우리한테 교훈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정비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정부 내에 지금 테러 관련 법규가 제대로 정비된 게 없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테러 관련은 정부의……

○임종석 위원 대통령훈령이 있을 뿐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임종석 위원 지금 관련 법규도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전 세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고민을 해 보겠지만 아무래도 이 문제는 정부에 정보나 또 어떤 방법으로 이것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는지 더 축적이 되어 있을 테니까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서 관련 법규를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준비를 정부에서 좀 해서 국회랑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국정원이 나서서 최종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 이것은 역시 사실 우리 대통령훈령에 의하더라도 조금 안 맞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국정원장의 처신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든 정부 부처의 조율에서 발생한 문제이든 간에 국민들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부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해 나간다 하는 것이 보여야 할 텐데, 우리 대통령훈령에도 해외테러는 외교부가 주무부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국정원이 갖고 있는 어떤 조직력 정보력,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전면적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요. 다만 어떻게 이것이 부처간에 조정이 되고 주무부처와 지휘체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좀 더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단순히 대통령훈령 47조의 대테러 활동지침 정도 가지고는 곤란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번 일 이후에 우리가 보니까 지금 아랍·이슬람 지역, 중동 지역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정도 차이는 있더라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외교부에서 따로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보호대책을 따로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고요, 선교사를 파송한 기관 대표들을 외교부에서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지역은 위험하니까 선교 활동을 자제를 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안전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정보를 주고 또 설득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지에서도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하는 이러한 태세는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석 위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게요,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 의식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지난번 김선일 사건 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외교부가 네 번인가를 그쪽에 연락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안 나왔잖아요. 결국 불행한 사고로 이어지고 또 국민들이 그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번 문제를 바라보면서 국민들 의식도 많이 변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외의 대사관, 영사관을 중심으로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나 정세에 대해서 우리 교민들, 선교사들이 파악하고 우리 대사관, 영사관과 연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점검해 보면 예전하고는 좀 다른 위기감들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더 꼭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외교부에서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이쪽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 숫자 같은 게 정확하게 파악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개략적인 숫자는 파악하지만 정확하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임종석 위원 아니요, 조금 더 노력하면 훨씬 더 근접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만 해도 문광부에서 제가 따로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거랑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제가 짐작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점검하세요. 또 불행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장관님께서 늘 자신 있게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웃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호소해 드리는 겁니다.

○임종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국민들이 확실히 인식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교부가 기존에 했던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교육하고 연락망 점검하고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관련 재단인가가 어디였지요? 거기서 한 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실비용을 자기들이 대겠다 그런 적 있지요? 정부에서도 실비용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실비용을 정산하자고 그랬습니다, 정산.

○임종석 위원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임종석 위원 어디랑…… 그쪽엔 누가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단체와 지금……

○임종석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우리가 지금 실제 들어간 실비를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교회 측에 주게 돼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종석 위원 그러면 교회 쪽에서 그 비용을 대겠다고 돼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임종석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법적 행정적으로 지침이 있어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이건 실비니까요, 실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호텔에 묵은 비용, 무슨 비행기 타고 간 비용 등등 실제 그 사람들 밑에 들어간 비용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 위원 아니,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는 실비들을 다 청구하지는 않지요. 그 사람들이 어겼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가지 말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국가재정에 손해를 미쳤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아니, 그것은 구상권 이야기고요, 그 구상권은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부가 우선 돈을 입체를 해 가지고 지불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구상권 차원에서는 그 사람의 과실행위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임종석 위원 지난번에 일본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었습니까? 3명인가 구출해 냈을 때 일본에서 한창 구상권 논쟁이 있던데……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일본도 실비 정산 개념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 핵문제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핵 불능화 문제는 어느 단위에서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은 아직 불능화의 부분을 어디어디 불능화할지에 대해서 실무조사단이 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팀이? 그 사람이 가져온 리스트를 가지고, 협의한 리스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6자회담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이제는 어디어디까지 할 것인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임종석 위원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지금은 불능화 자체가 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절차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북한의 의지나 미국의 의지에 사실은 중요하게 달려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9월 3일 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연내 핵 시설 불능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사실입니다.

○임종석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제재를 해제하는 등의 보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도 발표했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예, 그 두 개가 묶여서 하나의 사실이라고 봅니다.

○임종석 위원 그러면 미 국무부가 일부 사실을 부인한 것은 아주 구체적인 세부 합의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에서이지 연내 핵 시설 불능화하고 테러지원국이나 적성국교역법의 문제를 해제하는 원칙적 합의는 된 거다 이런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그렇게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임종석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앞서 진영 위원님께서 실사조사단에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북한이 이 문제는 철저하게 북·미 문제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북·미 간 회담의 의제보다 남북 간에 다루는 의제가 늦어서는 안 된다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상회담 앞두고도 어떠어떠한 문제는 의제로 삼니 마니 참 저는 이런 논쟁이 안팎에서 되는 게 너무 답답해요. 어떤 문제라도 의제로 삼아야지요. 우리가 지킬 문제와 우리 원칙이 분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문제도 의제로 삼아서 주로 우리가 일차 관심인 문제들이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테이블에서 논의되는 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치 이것이 통일부나 국방부랑 무슨 이견이 있는 것처럼 나오고 하는 것이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관련 정부의 원칙이나 입장들이 단일 창구에서 조정되어서 좀 덜 혼란스러운 상태로 준비가 돼서 오히려 국민들도 어떠어떠한 의제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대략 다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이 남북 간 정상회담의 특성상 미리 결과를 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이 좀 더 분명하게 예측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또는 일부 보수언론들이 NLL 문제를 의제 삼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제로 삼아야지요. NLL에 대한 우리 원칙이 분명하면 되는 것이지요. 서해안의 평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경제 공동체 문제, 모래 위에 집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선은 평화 조치를 우리가 합의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어떤 원칙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간다 이런 게 분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 그런 잡음이 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훈 본부장님, 한 가지만요.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은 언제쯤 다루어질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아무도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임종석 위원 올해는 어렵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그렇게 보는 관찰이……

○임종석 위원 언론에서 내년 봄이나 돼야 의제로 다룰 거다 이렇게 흘러나오던데, 외신엔.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다수 의견은 그렇게 봅니다.

○임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는 올해 안에 우리 국회는 이것을 다루는 것이 좋다 이런 입장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반드시 올해는 아니더라도 조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임종석 위원 이것도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는 데 찬성해 온 사람입니다마는 이제 어떻게 절차를 밟아 나갈 거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역점을 두고 정부가 추진해 온 마당에 지금 시점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연내에 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소모적 공방으로 가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잘 판단하셔서 소모적 논쟁으로 안 가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기 안에 보니까 몇몇 위원님들은 연내에 뭐 이것을 비준하기 위한 서명도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되면 엉뚱한 국력 손실이 되거든요. 또 미국 의

회에서 이것을 해 나가는 것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미국 의회가 이것을 다루기 전까지 또 다른 문제점들은 불거질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게 정부 차원에서 잘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알겠습니다.

○임종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외교통상부 소관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장영달 위원, 고흥길 위원, 권영세 위원, 임종석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중 김광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在外國民登錄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世界貿易機構協定의履行에관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

6.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가입 동의안

(15시56분)

○위원장 김원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가입 동의안, 이상 3건의 법률안과 2건의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법률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송민순 존경하는 김원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를 대신하여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그리고 재외국민등록법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의 일부개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동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추진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2006년~2010년)에 따라서 현행 법률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자 표현을 한글 표현으로 바꾸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일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재정리한 것입니다.

정부는 동 개정 작업이 현재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를 대신하여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그리고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가입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1995년 1월 9일 가입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중 그동안 수락을 유보하여 왔던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고문방지위원회의 권능을 수락하는 선언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문 반대 및 인권 보장 의지를 재천명하려고 합니다.

동 수락 선언은 첫째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우리나라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다른 당사국이 통보하는 경우에 고문방지위원회가 이러한 통보를 수리하여 심리할 권능을 보유함을 인정하고, 둘째로 고문방지위원회가 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개인의 청원을 수리하여 심사할 권능을 보유함을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가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항공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제항공운송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세계 제8대 항공대국으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협약은 첫째 운송증권 및 항공운송장의 교부를 정보나 기록을 보존하는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티켓 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둘째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희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들 3건의 법률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6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정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 어려운 전문용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문맥도 부자연스러운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쉬운 말로 풀어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도 이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며, 법 문장의 표현을 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실질적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신속하게 심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 중 주어와 술어 등 문장성분 간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나 정비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정하여 문맥상 어색한 표현이 있는 경우와 같이 일부 내용은 체계·자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 수락선언 동의안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1995년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의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고문방지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인권 침해 문제를 심리할 수 있는 권능을 수락하려는 것입니다.

동 협약 제21조는 특정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협약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고문방지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제22조는 고문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가입 당시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의 현실과 난민 신청자들의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협약 제21조 및 제22조를 유보하였고, 최근까지도 정부는 동 조항들의 수락 선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여론이 수락 선언을 촉구하고 있고 실제로도 남용의 우려 등 현실적 부담이 크지 않으며, 수락 선언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인권 보장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수락 선언에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가입 동의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기존의 바르샤바 체제를 현대화하고 통합화하기 위해 1999년에 채택되어 2003년에 발효된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려는 것으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승객 주소지를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관할로 추가하며, 전자티켓 발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래 정부가 몬트리올 협약의 가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사유는 협약 체결 당시 관계 부처 및 항공업계의 이견 때문이었으나, 운송 구간별로 적용되는 협약이 달라 초래되는 혼란을 해소하고 국외에서 피해를 보는 우리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승객 주소지의 재판 관할을 인정하며, 나아가 전자티켓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관계 부

처 및 항공업계도 동 협약 가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가입에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원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제6항까지의 법률안과 동의안을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고홍길	권영세	김광원	김덕룡
김무성	김용갑	김원기	김원웅
남경필	문희상	박 진	박희태
배기선	이강래	이해봉	이화영
임종석	장영달	정몽준	정의용
진 영	최 성	최재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 희 권
전문위원	허 태 수

○정부측 참석자

외교통상부

장관	송 민 순
통상교섭본부장	김 종 훈
기획관리실장	박 준 우
북미국장	조 병 제
동북아시아국장	김 재 신
남아시아대양주국장	이 경 수
재외동포영사국장	김 봉 현
한미자유무역협정 기획단장	이 혜 민
대변인	조 희 용